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동독의 대북정책
- 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Cho-Rong Lim

동독의 대북정책 - 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임 경 훈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Cho-Rong Lim

Cho-Rong Lim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위 원 장 권 형 기

부위원장 임 경 훈

위 원 김 용 균

국문초록(16pt)

주요어 : 동독, 북한, 외교관계, 대북정책
학 번 : 2018-20862

본 논문에서는 동독이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의 집권기에서 호네커(*Erich Honecker*) 집권기로 넘어오면서 동독과 북한의 관계가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었고, 어떻게 활발하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독과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동독이 마주한 체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동독에게 멀리 떨어진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고 같은 공산권 국가이지만 동독과는 이념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동독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유지를 넘어, 협력적이고 활발한 상호관계로 변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동독이 북한과의 관계를 동독의 체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장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고 동독은 건립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자국민으로부터도,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성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에게는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동독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분석을 또한 한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은 동독의 역사적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해석을 중점으로 두고 단일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1차 자료로 동독 외무성(*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의 아시아 지역을 관할 부서인 '극동 부(*Abteilung Ferner Osten*)' 및 독일 연방 기록보관소(*Bundesarchiv*)의 독일의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이하 사통당)의 정치국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접근 가능한 독일 외교부 아카이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s Amtes)*의 각료 회의 문서, 보고서 및 편지 등의 1차 자료와 신문, 논문 및 동독의 대외정치와 국내정치체제에 관련된 연구 단행본 등의 2차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외교문서와 기타 자료들을 데이터수집 이후 그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구조화하여, 그 내용을 각 시기 및 범주에 따라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독과 북한의 국교는 냉전 시대에 수립되었으며, 당시의 이념갈등 특성상 동독의 외교관계 수교가 1972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외교적 동맹국의 선택의 폭은 소수의 국가로 제한되었고, 동독에게 북한은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실용적인 이유에서 관계를 완전히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1950~1971년 울브리히트 집권기에, 동독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동독이 북한을 더 이상 1950년대처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이 체결된 협정의무를 꾸준히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수교 초기의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의 연대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의미했다. 동독이 입각한 국제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폐쇄경제)과 개인숭배 간의 이념적 괴리 또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관계변화의 양상과 시점에 대한 선행연구는 강-슈미츠(Kang-Schmitz, 2011), 이경석과 김경미(2016) 등이 있고, 본 논문에서 역시 이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호네커의 집권 이후 분명한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호네커는 사전에 방북을 계획하고 새로운 협정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는 양국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서한 교환이 이뤄졌다. 이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호네커 집권기에 동독은 서방 국가들과 수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굳이 더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는 동독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까지 동독의 대외정책에 관해 이루어진 소수의 선행연구도 주로 동독과 서독의 관계와 소련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 동독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연구의 초점이 동독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동독의 대외정책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집스(Siebs, 1999)[1], 벤트커(Wentker, 2007)[2] 그리고 숄티젝(Scholtyseck, 2003)[3]의 연구도 동독의 대북정책 혹은 동독의 대아시아정책을 다룬 저자는 아니다.

본 논문에서 분석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동독도 북한과의 외교관계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호네커 시기 활발해진 이유로는 첫째로 동독과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북한의 태도와 동독이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활발한 관계가 동독의 체제현상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의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동독이 생각한 국제사회주의는 '상호간의 친선, 호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성과와 이익 및 목표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그 외에도 체제붕괴를 피하기 위해 공산권이 번영하길 바랐던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동독에게는 사회주의체제를 현상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동독이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크게 만족하다기 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관계유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조약의 내용을 지키려 노력한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

1) 동독의 대외정책을 1976-1989년 다루지만 북한이 책 전체에서 딱 한번 나열되고, 아시아 지역은 동독의 제3세계 정책의 맥락에서 언급될 뿐이다.
2) 동독의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존연구이지만 동독의 아시아 정책은 5페이지에서 다루고 중국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북한이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며, 동독이 한국전쟁 후 재건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용한다.
3) 동독의 대외정책 전반을 다룬 또 다른 기존연구이며, 북한이 2번밖에 나열되지 않는다.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연구의 설계 ····· 3

1. 연구 질문과 사례 선정의 배경 ····· 3

2. 연구 방법 및 자료: 질적 내용분석, 연역적 접근 ····· 4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 6

제 1 절 동독의 정치사: 주권국가 위상 인정 전후 ····· 6

1. 동독에게 주권국가 위상의 의미 ····· 6

2. 동독·북한 외교사 개요 ····· 8

제 2 절 동독 대외정책 해석의 이론적 기반 ····· 13

1. 현실주의 ····· 13

2. 국내·국제정치 맥락과 연관성 ····· 14

3. 이데올로기적 연관성과 목표지향성 ····· 16

4. 원칙: 국제사회주의 및 평화로운 공존 ····· 17

5. 동독의 대외관계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배경 ····· 18

제 3 장 동독의 외교문서에 기반한 대북정책 분석 19

제 1 절 동독의 대북정책 사업 ····· 20

1. 동독의 북한 원조 및 대출 ····· 20

2. 북한과의 경제 협력 ····· 23

3.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 25

제 2 절 동독·북한 협력: 1980~1990년 ····· 26

1. 호네커의 공식 북한방문 ····· 27

2. 북한과의 외교관계 평가 ····· 30

3. 1980~1990년: 조약 재체결, 문화사업 ····· 34

제 4 장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친 동독의 국내·국제정치적 조건 ····· 35

제 1 절 동독 설립의 구조적 조건요인 ····· 35

1. 국제체제의 양극화 및 동·서독 간의 경쟁: 동독 설립 및 체제의 종속 ····· 35

2. 동서 갈등구조와 공산권 ····· 38

제 2 절 동독 '존립' 조건 및 불안정 요인 ····· 38

1. 동독의 체제 도입: 체제 건립 및 사회개조 ····· 38

2. 동·서구권 체제경쟁 ····· 40

3. 동독 체제 결점: 주권, 정체성 및 정당성 결손 ····· 42

제 5 장 결론 ····· 45

참고문헌 ····· 49

Abstract ·····

표 목 차

[표 1] 호네커 집권 하 북한과의 교류 ····· 29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동독과 북한의 외교관계는 동독이 건립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1949년 10월 6일에, 북한이 먼저 수교를 제안하면서 수립되었다. 양국관계는 1990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총 41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냉전시기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였던 점을 제외하면 동독에게 멀리 떨어진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

특히 1950~1971년까지 동독의 국가수석인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하에서 동독의 대북정책은 주로 소련의 지침을 따랐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동독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지니지 않았다. 일례로, 당시 동독 초대총리 그로테볼(*Otto Grotewohl*)의 1955년 12월 북한 첫 공식방문은 단독 일정이 아닌, 중국답사 일정 중에 들른 것에 불과했다.[4] 더 나아가 사회주의권의 경제안정화와 정치적 체제안정화 초기단계에 동독의 주된 대북정책 사업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관계였지만 상호간 교역이 아닌 동독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수교 후 1955년 최초로 북한이 동독에게 원자재를 납부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상호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사실상 경제적 협력 관계에 머물렀던 양국관계는, 북한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독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동독에게 믿음직한 형제국가는 아니었다.

동독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다양한 외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사회주의 연대를 내세우며 수립된 관계를 형식적으로 유지했을 뿐, 북한과

---

4) Schäfer, Bernd. 2004. *Weathering the Sino-Soviet Conflict: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4: 25 - 38. Retrieved from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publication/CWIHP_Bulletin14_15.pdf

달리 동독은 이 관계에서 크게 득을 봤다고 할 수 없다. 처음에 강조되었던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 연대 또한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개인숭배체제가 구축되면서 국제사회주의에 입각한 동독에게는 이념적으로도 북한과의 갈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호네커(*Erich Honecker*) 시절 갑자기 두 국가 간 외교관계는 활발해졌고 이러한 변화양상은 동독의 대북정책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 즉, 양국관계가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기에 따라 관계의 방향성과 깊이에서 부침을 겪었다는 것이다. 울브리히트 집권기에는 동독이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주는 관계였으며, 또한 동독에게 북한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외교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에 비해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동독의 경제가 점차 안정되고, 북한의 경제도 그 즈음에 자리 잡으면서 동독도 점차적으로 북한에게 외교 사업 제안하고 양국 간에 많은 협상이 이루어진 시기다.

본 논문은 동독 입장에서 지정학적인 의미가 미미해 보이고 조약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활성화가 돌연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주의 관점에서 동독의 대외적 행태 및 대외정책을 규정하는 정치적 환경과 동독의 '국익' 설정에 대한 배경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동독은 체제안정화와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얻기 위해 어떻게 대북정책을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호네커가 왜 자신의 전임자와 달리 굳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활성화시켰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동독은 건립부터 붕괴까지 체제존립에 대한 정당성부족이라는 불안정요소를 직면해왔고, 체제안정화가 정치국의 최고우서 순위 목표였기 때문에 대외정책마저도 국내정치를 위해 동원되었다는 학문적 평가에 기반한다.[5)]

---

5) Heydemann Günther. 2003. *Die Innenpolitik Der DDR*. München: Oldenbourg.
Scholtyseck, Joachim. 2003. *Die Aussenpolitik Der DDR*. München: R. Oldenbourg.
Judt, Matthias. 1998. *DDR-Geschichte in Dokumenten : Beschlüsse, Berichte, Interne Materialen Und Alltagszeugniss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울브리히트와 호네커 집권 하에 국내·대외적 상황이 변한만큼 동독의 대외적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6]에 동독의 대북정책에 대한 동독측의 입장분석은 이목을 끌지 못했다. 이 부분의 연구 공백을 동독에게 아시아 지역의 대외정책이 가지는 지정학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동독에게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 중·소 분쟁 중에 동독과 북한 양국 간의 이념적 대립이 두드러졌음에도 협력이 꾸준했다는 점에서 동독에게 북한과의 관계가 왜 중요했는지를 다루는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제 2 절 연구의 설계

1. 연구질문과 사례 선정의 배경

본 논문은 1980년대에 들어 동독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왜 돌연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독 입장에서 북한은 지정학적인 의미가 미미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국 간의 조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렇듯 관계가 변화한 요인이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강화된 호네커 집권기에 관찰된 북한에 우호적인 방향으로의 관계변화는 북한이란 동맹국에 대한 인식이 동독 국가주석의 차원에서 갑작스레 변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연구질문을 다루기 위한 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독의 대북관계 변화양상을 규정해야 한다. 냉전시기에 진행된 정치이념 및 정치체제의 대립인 사회주의 대 비사회주의 동독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특히 호네커 집권시기의 동독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활용

Siebs, Benno-Eide. 1999. *Die Aussenpolitik Der DDR 1976-1989 : Strategien Und Grenzen*. Padeborn ; Munchen ; Wien ; Zurich: Schöningh.,

했는지 또한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독과 북한의 외교관계에 중대한 요소인 소련의 영향과, 서독·서구국가와의 경쟁구조를 고려하여 41년 가까운 양국의 외교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기본적인 틀을 설정한 이후에는 세부적으로 동독 입장에서 어떤 국내·국제 환경 속에 북한과의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독 외무성(*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의 아시아 지역을 관할 부서인 '극동 부(*Abteilung Ferner Osten*)' 및 독일 연방 기록보관소(*Bundesarchiv*)의 사통당의 정치국 관련 1차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시적인 동독의 대북관계 변화양상을 설명한 후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독의 국내외 환경과 전반적인 정치사, 즉 2차세계대전 결과로 독일 분단되었고, 동·서독이 '강대국'에서 각각 소련과 미국 점령지역, 즉 위성국으로 전략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독은 소련의 지도부로부터 존립을 보장 받기는 했으나, 동독의 정치엘리트는 소련과의 관계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점차적으로 모스크바의 개입으로부터 독립하길 원했다.[7]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냉전이라는 시대상황에서 동독이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 체제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떠한 위협요소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질적 내용분석, 연역적 접근

본 연구는 동독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호네커 집권 때 왜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해석에 중심을 둔 단일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

7) Wentker, Hermann. 2007. *Außenpolitik in Engen Grenzen Die DDR Im Internationalen System 1949-1989. Veröffentlichungen Zur SBZ-/DDR-Forschung Im Institut Für Zeitgeschichte*.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단일사례연구는 다양한 출처의 상세하고 심층적인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그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구조화하여 시기별로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8] 그리고 자료가 매우 세분화되어있는 만큼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마이링(*Philipp A. E. Mayring*)의 방법에 따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본 사례연구의 많은 자료를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지정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다.[9] 이렇게 자료를 내용에 따라 구조화하여 자료를 보다 단편화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분석의 목표는 특정 범주에 맞는 정보를 강조하거나 채색하여 자료의 특정 측면을 걸러내고, 사전 정의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추리고 특정 기준에 따라 자료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량적 내용분석과 달리 마이링의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해석 가능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가 형성된 범주에서 의미를 갖는다.

접근 가능한 독일 외교부(*Auswärtiges Amt*)가 소장하는 외교문서, 그 중 각료 회의 문서, 보고서 및 편지 등의 1차 자료와 신문, 논문 및 동독의 대외정치와 국내정치체제에 관련된 연구 단행본 등의 2차 자료들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연구시기는 선행연구에서 외교문서 바탕으로 다루지 못했던 호네커 집권 이래 1971년부터 1990년까지이다. 그리하여 본론의 주된 자료는 1970년~1989년까지 동독 외무성 자료, 특히 정치국의 문서들과 극동 부의 북한관계를 기록한 모든 문서들이다. 그 외에도 접근 가능한 독일 연방 아카이브(*Bundesarchiv*)와 독일 외교부 아카이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s Amtes)*의 모든 자료를 활용하였다.

---

8) Creswell, John W, and Cheryl N Poth. 201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Los Angeles: Sage.

9) Mayring, Philipp. 2015. *Qualitative Inhaltsanalyse : Grundlagen Und Techniken*. Weinheim, Bergstr Beltz, J.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본 장에서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로 동독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을 다룬 연구 중 정치사, 외교사와 대외정책 이론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의 경향을 정리하며 검토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독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북한과 같은 개별 국가에 대한 대외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독·북한 외교관계를 연구한 몇몇 학자들조차 주로 북한측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 해외자료를 통해 북한을 연구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 가ㅗ정에ㅓ 동독의 입장은 대체로 제외되었다. 즉, 이 연구는 이제껏 동독의 입장에서 평가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다룬 연구가 미흡하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최근 공개된 동독의 사료를 통해 동독에게 북한과의 관계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졌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보여준다는 점에서 넓게는 냉전시기 공산권 국가들 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장에서는 동독의 국내적, 대외적 환경에 따라 동독의 대외정책에서 대북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동독에게 형제국가로서 북한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동독의 정치사: 주권국가 위상 인정 전후

1. 동독에게 주권국가 위상의 의미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통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재된 문제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원인으로는 정당성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다시 크게 자국민으로부터의 승인 부족과 국제사회

로부터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 및 국외에서의 정당성 부족은 동독 정치국이 마주했던 주된 불안정 요소였고 그리하여 모든 국내·외 정책이 우선적으로 동독의 체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10] 이처럼 동독의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부분적으로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된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공통적으로는 동독이 체제유지에 대한 특별한 '집착'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11]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또 다른 공통된 의견은 동독이 소련에 의존한 결과로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다.[12] 소련에 대한 동독의 종속관계는 동독에게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주권국가로서 동독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동독의 국가주석이었던 울브리히트와 호네커는 모두 동독이 소련의 위성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지만 이들은 소련에 의한 동독의 종속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였다. 소련의 점령 지역이었던 동독은 경제·군사·정치적으로 소련의 통치범위 해당하였으므로 초기 동독의 국가존립은 전적으로 소련 지도부를 통해서 보증되었다.[13]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통제했던 동독 정치국에게는 동독의 대외정책에 있어 자국민으로부터의 정당성 결여라는 국내정치적인 측면이 국제정치정세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14]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시기는 호네커 집권기이지만, 더 나은

---

10) Fraude, Andreas. 2006. *Die Außenpolitik Der DDR*. Erfurt: Lzt.

11) Wentker, Hermann. 2007. *Außenpolitik in Engen Grenzen Die DDR Im Internationalen System 1949-1989. Veröffentlichungen Zur SBZ-/DDR-Forschung Im Institut Für Zeitgeschichte*.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12) Siebs, Benno-Eide. 1999. *Die Aussenpolitik Der DDR 1976-1989 : Strategien Und Grenzen*. Padeborn ; Munchen ; Wien ; Zurich: Schöningh.,

13) Childs, David. "East German Foreign Policy: The Search for Recognition and S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Toronto)* 32, no. 2 (1977): 334-51.

14) Amos, Heike. 2015.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Ziele, Aktivitäten Und Konflikte*. Vandenhoeck & Ruprecht.

이해를 위해서 동독의 정치사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때 동독의 정치사는, 동독에게 국제법에 따른 주권국가 인정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주권국가 위상 인정 전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분단되었고, 냉전의 양극체제 대립이 투영됨으로써 독일에는 정반대인 정치체제 간의 경쟁구조가 형성되었다. 동독은 자국민 즉, 국내로부터 그리고 국제사회 즉, 국외부로부터 까지 자신의 존립에 대한 정당성 부여가 필요했다. 립셋(*Seymour M. Lipset*)은 정당성을 기존의 정치제도가 사회에 가장 적합하거나 적절한 것일 거라는 확신에서 유지하는 정치제도의 역량이라고 정의한다.[15)]

본 논문에서는 1949~1961년, 동독 설립과 울브리히트 시대를 정치체제를 공고화 시켜야 했던 시기로, 1961~1972년 동독의 체제 공고화로 인한 국내정치에서 국제정치로 중점을 맞춘 호네커 시대로 그리고 1972~1980년 시기로 데탕트 분위기에 대외정책에 있어 행동범위가 넓어진 시기로 나눈다.

2. 동독·북한 외교사 개요

먼저 동독·북한의 양국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는 셰퍼(Bernd Schäfer, 2004), 강-슈미츠(Liana Kang-Schmitz, 2011), 이경석과 김경미(2016) 등의 몇몇 선행연구들의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었으며, 공산권 내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동맹국의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두 국가는 모두 양극화된 국제사회와 자국민에게 꾸준히 자신의 존립을 정당화해야 했으며, 소련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었던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표면적으로는 호의적인 관계로 보인 것과 달리 에서 밝

15) Lipset, Seymour M..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1): 69 - 105. https://doi.org/10.2307/1951731.

힌 바는 동독과 북한의 수교에 대한 꾸준한 미사여구와는 달리 친소련과 친중국 노선을 오갔던 북한과 동독의 관계에 분명한 부침이 존재했고 이는 북한이 맺었던 소련과의 관계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16] 중·소 분쟁 시기는 북한이 친소련과 친중국 노선 사이를 오가는 균형전략을 실행할 때 특히 동독·북한 관계에서 소련이 결정적인 변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기이다.

이 논문에서 북한과 동독 간의 외교관계는 이경석과 김경미(2016)의 시기별 구분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친교를 수립하는 시점인 1949년부터 1954년까지를 수용기로 정하고 동독의 일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로 정의한다. 1955년은 북한이 처음으로 동독에게 약속된 원료를 납부하는 시점이자 195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협력기로,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후반까지는 중·소 분쟁에 의해 관계에 갈등요소들이 부각되었던 변동기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을 호황기로 규정한다.

먼저 1949년부터 1954년의 수용기 때 동독·북한 외교관계는 냉전시기 특성상 초반에 경제적인 협력관계로 볼 수 있으나, 한국전쟁 후 1954년에 각국이 대사를 정식 파견하기 전까지 서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외에는 협력 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다. 서신에서는 분단경험과 사회주의적 이념적 유대가 강조되며 친교 수립에 있어서 주된 동기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의 수교에 대한 필요성이 양측에서 강조되었으나, 실제로는 동독이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소극적이었다.[17] 이러한

---

16) Schäfer, Bernd. 2004. *Weathering the Sino-Soviet Conflict: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4: 25 - 38. Retrieved from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publication/CWIHP_Bulletin14_15.pdf

Kang-Schmitz, Liana. 2011. *Nordkoreas Umgang Mit Abhängigkeit Und Sicherheitsrisiko Am Beispiel Der Bilateralen Beziehungen Zur DDR*. Berlin Epubli Gmbh.,

이경석, and 김경미. "냉전기 북한-동독의 외교관계(1953~1989): 협력과 갈등." *유럽연구* 34, no. 3 (2016): 149-80.

17) Kang-Schmitz, Liana. 2011. *Nordkoreas Umgang Mit Abhängigkeit Und*

해석에 대한 근거는 그로테볼의 첫 북한 방문이 1955년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여러 동아시아 국가 방문의 일정 중 하나의 거쳐가는 일정이었던 것을 보아 북한이 당시에 동독의 동맹국가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는 잠에서 알 수 있다.[18] 더 나아가 이때까지는 상호적인 협력이 이루진 것이 아니라 6.25전쟁으로 인한 전후 사태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북한이 동독으로부터 일방적인 원조를 받던 시기였다. 당시에 동독에게 북한이 지정학적인 의미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복구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동독이 약 500억 마르크 규모의 대북한 경제 원조를 지원한 것[19]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이 소련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추가적으로 동독에게 북한의 재건비용을 부담하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20] 그렇기 때문에 동도의 대북한 원조는 동독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였다기보다 소련과 맺은 전쟁배상금의 의무사항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1955년 북한이 수교 후 최초로 동독에게 46만 마르크 규모의 원료를 보낸 해를 협력의 시작점[21]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6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양국관계가 정체를 겪으며 변동기에 들어선 갈등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 이념과 동·서구권 데탕트 분위기에 대한 입장차이가 드러난 시기이다.[22] 소련과 동독은 스탈

Sicherheitsrisiko Am Beispiel Der Bilateralen Beziehungen Zur DDR. Berlin Epubli Gmbh.

18) Schäfer, Bernd. 2004. *Weathering the Sino-Soviet Conflict: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4: 25 - 38. Retrieved from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publication/CWIHP_Bulletin14_15.pdf

19) Volker Grabowsky. 1987. *Zwei-Nationen-Lehre Oder Wiedervereinigung? : Die Einstellung Der Partei Der Arbeit Koreas Und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Zur Nationalen Frage Ihrer Länder Seit Dem Zweiten Weltkrieg : Ein Vergleich*. Bochum: Brockmeyer.

20) 김면. "독일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과 구동독간의 경제협력 - 구동독의 함흥시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7, no. 1 (2003): 83.

21) Frank, Rüdiger. 1996. *Die DDR Und Nordkorea : Der Wiederaufbau Der Stadt Hamhùng in Nordkorea von 1954-1962*. Aachen: Shaker.

린 사망 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개인숭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반면 북한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조하면서 소련 및 동독과 대립했다. 또한 소련과 동독은 침체하는 공산권경제 속에 서구권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반해 북한은 중국과 같은 입장을 표방하여 여전히 서구권에 대한 적대감을 표했다.[23] 소련과 동독은 서구권의 우세한 경제정세로 인해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여 통일보다 평화로운 공존을 선호했었다. 이처럼 이 시기는 사회주의 진영 내 소련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일어난 시기로 대외적으로 친중국 노선과 자주외교를 추진했던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동독과의 외교관계도 정체되었다. 동독의 북한과의 협력이 초반 시기에 소련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던 점 외에도 북한이 동독과 채택한 조약 의무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못했던 점 또한 관계를 정체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동독과 북한의 관계가 정체됨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국제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친선을 유지하고자했기 때문에 북한과 이념적 갈등을 겪고, 북한이라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낮았어도 경제협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동독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동독이 과학기술 측면에서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대신 북한은 동독에게 부족했던 원료를 납부하는 형태를 띠었다. 동독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대체로 이행했던 반면 북한은 내부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동독과 북한은 이념적 측면과 경제협력 측면에서 원만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슈타인 독트린에 의해 외교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동독은 체결된 조약들을 철회하지 않았다. 극동 부와 사통당 정치국이 작성했던 보고서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보다는 국제사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이념적 유대관계가 강조되었고, 동독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북한'을 동구권의 통합

---

22) Shapiro, Jane P. "Sovie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Pacific Affairs* 48, no. 3 (1975): 335-52.

23) Luthi, Lorenz M. *The Sino-Soviet Split [electronic Resource] : Cold War in the Communist World / Lorenz M. Luthi*. Course Book. ed. Princeton Studies in International History and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을 위해 인도해야 하는 '책임의식'을 가졌다고 표현하였다.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이하 기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주권국가로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자신의 체제존립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동독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제3세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맺어나갔다.[24]

호네커 집권 하에서 전후 기간 종료와 함께 동독 대외정책의 폭이 확장되면서 세계정치참여에 나섰던 동독은 모든 국제관계를 동원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속에 자신의 체제공고화에 집중했다. 북한은 제3세계 외의 동맹국이었으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독의 대외활동 확장전략을 보았을 때 호네커가 북한의 의미를 울브리히트와 달리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갈등기를 넘긴 호황기이다. 이시기에 동독 외무성에서는 호네커의 북한 방문 직전 새로운 조약들과 이전의 조약들을 재체결할 준비를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새로운 우정 조약을 체결하고(1984.06.01.), '1990년까지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합의(1984.06.01.)' 및 '1986~1990년 동안의 동독과 북한의 외무성 간의 협력'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이 시기는 외교관계가 절정으로 활성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루어진 호네커의 공식 북한방문은 1956년 이래로 첫 번째로 개최된 정상회담이었다. 또한 동독의 호네커 대표단과 김일성의 북한 대표단 간의 협의 결과로 국가·정당 수준에서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우호 조약 체결과 지역구 및 지방 수준으로의 각국의 공산당 간의 관계를 확장시켰다. 이외에도 이 회담에서 영사 관계에 관한 조약과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

24) Weber, Hermann. *DDR,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45-1985 / Herausgegeben Von Hermann Weber.*, 1986.

호네커가 추구한 대외정책은 역시도 동독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국민으로부터의 체제유지에 대한 정당성 부족이라는 딜레마와 서독과의 체제우월성 경쟁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십스는 1976~1989년까지 동독의 대외정책을 동독이 스스로 동독의 위상을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벗어나 소련과 동등한 수준의 동맹국가로 승격시킨 것으로 평가했다.[25]

제 2 절 동독 대외정책 해석의 이론적 기반

1. 현실주의

이 연구에서는 현실주의 관점에 기반하여 동독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정치학자들은 Morgenthau, Niebuhr, Kissinger 등으로, 현실주의에서 국가는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대외정책 목표 역시 비용의 효율적 활용을 지향한다.[26] 따라서 한 국가의 대외정책 역시 국가안보, 경제와 복지 보장 및 영토와 국경 보호와 같이 국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위해 시행된다. 현실주의에서 외교정책 결정의 핵심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확충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27]

동독은 설립 당시에 소련의 위성국가였으며 1954년 되어서야 소련으

---

25) Benno-Eide Siebs. 1999. *Die Aussenpolitik Der DDR 1976-1989 : Strategien Und Grenzen*. Padeborn ; Munchen ; Wien ; Zurich: Schöningh.

26) Georg Schwarzenberger, and Anneliese Herbst. 1955. *Machtpolitik - Eine Studie über di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Tübingen: Mohr.

27) Grieco, Joseph M. "Modern Realist Theory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Millennial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Studies*, 65.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9.

Schellhorn, Kai M. 1986. Der Staat: Die Wichtigste Aktionseinheit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Gottfried-Karl Kindermann, and Hans J Morgenthau. 1981. *Grundelemente Der Weltpolitik : Eine Einführung*. München: Piper.

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았으나, 이때의 인정마저 사회주의권 내부의 인정에 국한되었었다. 동독에게는 분단국가로서 체제유지가 지켜야 할 가장 일차적인 이익이었고, 서독보다 우세한 체제임을 특히 자신의 자국민에게 내새워야 했다.

이러한 이론틀에 기반해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의 동독과 북한의 외교관계 중 특히 흥미로운 지점인 동독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독이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을 운영환경과 심리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이며, 각 내용의 핵심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호네커의 상황 인시기 어떠했는가의 내용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적으로나 소련으로부터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호네커가 사회주의권이 붕괴할 조짐이 보이는 시기에 국내정치적으로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가 본 연구의 이차적 주요 분석 내용이다.

동독이 체제 안정을 꾀하는 상황은 특별한 이해관점의 수립을 초래했다. 동독 정치국은 국제 및 사회 간 정치 분야에서 행동전략개발을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수립해야 했다. 본 절에서는 주어진 틀의 조건 하에서 체제를 효과적으로 안정화하고자 어떤 외교정책을 계획하였으며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국내·국제정치 맥락과 연관성

울브리히트 집권기에 동독이 체제유지와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외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1954년 소련이 동독에게 '주권'을 부여하여 형식적인 주권을 갖추었어도 이는 오로지 소련의 정치적 지지와 지원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독의 대외정책은 공산권 내에서만 시행될 수 있었고, 역시 주로 소련의 이해관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28] 따라서 당시에는 소련과의 종속

28) Wentker, Hermann. 2007. *Außenpolitik in Engen Grenzen Die DDR Im*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사실상 동독의 존립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소였다. 이는 당시가 냉전기였음을 고려하면 소련과의 종속관계는 동독을 미국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울브리히트 집권기에 동독은 소련의 위성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동등한 위상을 주장하려 하면서도 예전부터 이어진 소련에 대한 실존적 종속은 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독은 공산권 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위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산권 밖에서는 독립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정치에서 동독은 비교적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었고, 국제관계에서 자립적인 행위자라기 보다 소련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대상이었다. 그리고 동독의 외교사는 주로 서독이 주도했던 세계적 고립에 대항하는 투쟁의 역사라고 평가된다.[29] 그러므로 울브리히트 집권기의 동독의 대외정책은 본질적으로 '대외정책'이 아닌 '독일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호네커 집권 하에서 기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전후 기간'이 종료됨과 함께 동독이 국제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정받게 되면서 동독은 대외정책인 활동 폭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동독은 공산권 외 국가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전에 대외적으로 소련의 통치범위 하에 있어서 공산권 밖 국가와의 수교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동독의 활동범위도 확장되었다. 동독의 대외정책은 더 이상 소련에의 종속관계 하에서 서독과 대응하는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및 세계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30]

동독의 대외정책은 주로 국제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통당의 통치체제를 정당화하고 공고화하는 것이었다.[31] 동독의 대외정책

Internationalen System 1949-1989. Veröffentlichungen Zur SBZ-/DDR-Forschung Im Institut Für Zeitgeschichte.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9) Lindenberger, Thomas. 1999. *Herrschaft Und Eigen-Sinn in Der Diktatur : Studien Zur Gesellschaftsgeschichte Der DDR*. Köln: Böhlau.

30) Ludz, Peter C.. 1980. *Die DDR Zwischen Ost Und West : Politische Analysen 1961 - 1976*. München: Beck.

31) Heydemann Günther. 2003. *Die Innenpolitik Der DDR*. München: Oldenbourg.

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도구적인 기능을 가졌다. 울브리히트 하에서 체제 안정화 기능은 주로 독일정책에만 국한되었다. 통일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칫하면 동독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동독의 체제 안정화가 동독 정부에게는 가장 큰 과제였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사회적 조건의 종속변수가 되며, 국내정치 목표, 행위능력 및 행위 융통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대외정책이 국내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사회 및 권력구조에 안정 또는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외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정당화되어야하고('합의(*consensus*)') 국제체제와 결합할 수 있어야한다('호환성(*compatibility*)'.[32]

다시 말해, 체제안정화가 동독의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은 기능적으로 안보정책에 종속되었으며 이는 곧 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국내정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3. 이데올로기적 연관성과 목표지향성

동독 대외정책의 이념적 토대와 원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동독의 대외정책에 형식과 기준으로서 포괄적인 틀로 기능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동독의 특정한 행동체계를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동독의 정치엘리트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공통적으로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비슷하게 내려질 수 있었다.

동독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침을 제시하고, 체제를 정당화 하는 것 외에 실행한 대외정책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동독 헌법에서는 대외정책의 목표를 '동적이고, 융통성 있고 대

---

32) Hanrieder, Wolfram F. 1967. "Compatibility and Consensus: A Proposal for the Conceptual Linkage of External and Internal Dimensions of Foreign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 (4): 971 - 82. https://doi.org/10.2307/1953399.

상을 특정할 것'임을 제시하며 동독 대외정책의 목표지향성이 명시되어 있다. 즉, 동독은 '사회주의와 평화, 그리고 민족 간의 의사소통과 안보를 위한 대외정책'을 추구했다.[33]

그러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대외정책의 범주는 실제 대외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기보다는 따라야할 규범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동독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가장 유리한 외부조건을 창조한다(122항)'고 서술되어 있으며, '평화와 안보가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독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에 종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34]

기본조약과 헬싱키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후 동독 대외정책적 목표의 가중치가 변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았다. 울브리히트 때 동독 대외정책의 영향력 확보에 대한 투쟁이 매우 중요했다면 호네커의 초점은 주로 사회·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동독 내부의 안정화에 맞춰져 있었다.

4. 원칙: 국제사회주의 및 평화로운 공존

동독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와 목표는 '국제사회주의'와 '평화로운 공존'이란 원칙을 지향했다. 이 두 개념에는 세계를 기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공격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나누는 이분법이 반영되어있다.

동독의 국제사회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독의 헌법에서 다음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주의 원칙은 '상호간의 친선, 호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성과와 이익 및 목표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35]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33) Thomas, Rüdiger. 1982. *Modell DDR : Die Kalkulierte Emanzipation*. München: Hanser.

34) Sieger, Gerd Joachim. *Verfassung Der DDR : Text : Einführung Kommentar / Bearbeitet Von Gerd Joachim Sieger*., 1980.

35) Mampel, Siegfried.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그리고 동독은 제8차 당 대회에서 명확하게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주의의 근간이자 핵심은 소련임을 확인하면서 소련과의 '끊기지 않는 연결고리'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동독은 '국제주의적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 국제 노동운동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현재의 혁명적인 3대 세력의 투쟁동맹의 공고화'를 지지했다.[36]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의 원칙은 '국가 평등,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영토보전 및 비 개입 원칙'[37]의 특징을 핵심으로 하며, 정치체제가 다른 국가와의 대외관계를 규정한 원칙이다. 또한 이 원칙은 사회주의 대외정책의 전략적 원칙으로서 '평화로운 공존'은 '세계혁명 과정을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주의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질적 조건'을 가져오는 맥락에서 점점 더 중요성을 얻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공존의 원칙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당시 국제관계에서 대립하는 반대의 이념갈등에 대해 오히려 변증법적 통합'을 제공하였다.[38]

5. 동독의 대외관계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배경

동독 설립 초기에 냉전시기의 동·서구권 이념갈등으로 인해 동독이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국가들은 소련 직속의 사회주의국가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동·서독은 정부설립부터 각자 독일 국민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인 소위 '유일 대표권'을 주장하였다. 1949~1954년 동독의 외교관계 수립초기단계에서 동독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9개 국가와 외교관

Republik : Text und Kommentar. 3. völlig neu bearb. Aufl. Frankfurt a. M: Metzner, 1972.

36) Honecker, Erich, an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1971. *Bericht Des Zentralkomitees an Den VIII. Parteitag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VIII. Parteitag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Berlin, 15. - 19. Juni 1971*. Berlin Dietz Verlag.

37) Schütz, Gertrud. 1989. *Kleines Politisches Wörterbuch*. Berlin Dietz.

38) Busse, Hartwig, and Klaus Lingner. *Sozialismus und Frieden / Hartwig Busse ; Klaus Lingner**. 2., überarb. Aufl. Berlin: Staatsverl. d. DDR, 1973.

계를 맺었다.[39]

이후 1954~1971년까지의 시기는 외교수립단계의 공백기로 볼 수 있다. 설정하였다. 이때 당시 서독의 정치지침이었던 할슈타인 독트린(1955~1969년)에 의해 제3국이 동독과 외교관계 맺는 것을 서독에 대한 '불우호적 행위(*unfreundlicher Akt*)'로 여겨 동독의 외교관계 수립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7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백기에 동독은 다른 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만 맺을 수 있었다.

데탕트에 들어서는 동독과 서독의 적대적 관계가 완화되고 기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972년부터 동독이 국제법적으로 주권국 위상을 인정받았으며, 할슈타인 독트린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1973년 후반 미국을 포함한 63개국이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고, 같은 해 9월 18일에는 동독과 서독이 동시에 유엔 가입국이 되면서 나름 우호적인 국제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975년 헬싱키 협정 서명도 호네커의 주요 대외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40]

제 3 장 동독의 외교문서에 기반한 대북정책 분석

본 장에서는 동독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호황기'로 불리는 시기에 초점을 맞춰 동독의 대북정책이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를 동독의 외교문서를 통해 살펴본다.

내용의 왜곡을 막고 정확한 문서를 지칭하기 위해서 아카이브에서 권장하는 인용 방식을 택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PA AA M 34/191189 (1980-1982): Konsularische Beziehungen DDR-KDVR,**

39) 같은 사회주의 국가 알바니아, 불가리아, 중국, 북한,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소련, 몽골과 외교관계 수립했었다.

40) **BArch DY 30/2350 (1973-1981):** Reden, Interviews, Artikel von Erich Honecker zu Fragen der Außenpolitik der DDR/SED

Vermerk über ein Gespräch mit dem Rat der Botschaft der KDVR, Genossen Kim Rjon Gil, am 25.3.1982 im MfAA (01.04.1982)'와 같은 인용 중에서 '*PA AA*'는 독일연방공화국 외교부의 아카이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뜻하고 'M 34/191189'는 약호 및 색인이다. 약호 및 색인 다음에는 외교문서 묶음의 기록 시기(괄호)와 문서 묶음의 제목이 이어지고, 뒤는 인용된 문서의 제목과 문서의 기록일(괄호)을 나타낸다.[41]

제 1 절 동독의 대북정책 사업

1. 동독의 북한 원조 및 대출

북한은 면화, 기름, 코크스 등과 같은 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 설립 시기부터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야만 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산업시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금속을 채굴하고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북한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준 나라는 소련과 중국 다음으로 동독이었다.[42]

동독의 발전된 산업기술은 북한이 기계공학 분야에 필요한 기술들을 구축하고 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했고 이러한 기술이전은 양국관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꾸준히 주요 사업대상이 되었다.[43]

---

41) *KDVR*는 *Koreanische Demokratische Volksrepublik*의 약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한다. 편의상 본문에서 '북한'으로 번역되었다.

42) Grabowsky, Volker. 1987. *Zwei-Nationen-Lehre Oder Wiedervereinigung? : Die Einstellung Der Partei Der Arbeit Koreas Und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Zur Nationalen Frage Ihrer Länder Seit Dem Zweiten Weltkrieg : Ein Vergleich.* Bochum: Brockmeyer. 및 **PA AA C 65/77 (05.1971): Botschaft der DDR in der KVDR,** Die sozial-ökonomische Entwicklung der KVDR 참고

43) 참고: **PA AA M 34/24987 (1980-1982): Wirtschafliche Zusammenarbeit DDR-KDVR**;
PA AA M 34/24987 (1982-1985): Bez. DDR-KDVR Industrie-Handel;
PA AA M 34/72890 (1983-1987):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ind.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동독은 1950년대 북한에 시설 재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여러 번의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북한은 산업시설의 재건뿐만 아니라 후에 북한의 5개년 경제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또한 동독에게 요청하였다. 동독은 이러한 자금대출을 동독의 설비 및 기계 구매와 북한산 비철금속 상환과 연결하여 이익을 챙겼으며, 북한의 원자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44]

동독은 1966년에 7년에 이자율 3%로 북한의 산업시설 건설 및 개발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고 이를 철광석 채굴을 위한 채굴 장비 공급 및 처리 공장, 자동화 장비 공장, 계측 사무실로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대출 협정 내용 수정 이후 1973년이 되어서야 조달이 시작되었다.[45]

대출 허용 1년 뒤인 1967년에 동독은 바로 다음 대출 요청을 받았으며, 당시 친소련 노선을 탄 북한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1968년 방적 공장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및 기계와 장비 납품을 위한 대출을 허용했다.[46]

이 외에도 1972년에는 김일성이 직접 국무회의 의장(*Vorsitzender des Ministerrates*) 슈토프(Willi Stoph)에게 서신을 보내, 200,000개의 스핀과 광산 장비를 갖춘 스테이플 섬유 방적 공장의 자금조달을 요청했다.[47] 1973년 3월 9일의 답변에서 슈토프는 방적 공장을 인도하지 못한

Kooperation;

PA AA M 34/60888 (1984-1986):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KDVR-DDR;

PA AA M 34/268190 (1986) Immaterieller Export;

PA AA M 34/269590 (1987-1988): Zusammenarbeit Wissenschaft u. Forschung DDR-KDVR

44) PA AA M 34/60888 (1980-1982):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KDVR-DDR, Information über die Gespräche mit einer Wirtschaftsdelegation der Regierung der Koreanischen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unter Leitung des Ministers und Beraters des Ministerrates, Genossen Kim Dal Hjon (24.03.1984)

45) PA AA M 1-A/7095 (1962-1966): Gespräche von Mitarbeitern der Botschaft Phoengjang mit Vertretern zentraler Dienststellen der KVDR bzw. Mitarbeitern anderer in Phoengjang akkreditierter diplomatischer Vertretungen über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kulturelle Fragen

46) PA AA M 1-C/102673 (1964-1968): Unterlagen zu Verträgen zwischen der DDR und Nordkorea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대신에 광석 처리 공장의 인도를 위해 새로운 대출을 약속했다. 동시에 북한이 상환을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답변에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했다:

"*1966년, 1968년, 1972년 양국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우리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공통으로 노력해 상환이 수행되게끔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48]

북한은 1976년에도 동독에 상환 기간 연기를 신청하였고, 거듭되는 상환 불이행에 동독은 비철금속 조달 조건을 납품 협정에 추가시키는 조건으로 상환 연기를 받아들였다.[49]

그러나 1980~1990년 고위관계자 간 서신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출금 상환 지연은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50]

---

47) **PA AA M 1-C/108078 (1969, 1972-1973): Aktenvermerk über Gespräche zwischen Diplomaten der Botschaft der DDR in Korea und Diplomaten sozialistischer Staaten in Korea**, Brief von Kim Ir Sen an den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Genossen Willi Stoph (20.11.1972)

48) **PA AA M 1-C/108078 (1969, 1972-1973): Aktenvermerk über Gespräche zwischen Diplomaten der Botschaft der DDR in Korea und Diplomaten sozialistischer Staaten in Korea**, Brief von Willi Stoph an den Präsidenten der KVDR und Vorsitzenden des Zentralen Volkskomitees der KVDR Genossen Kim Ir Sen (09.03.1973)

49) **PA AA M 1-C/108078 (1969, 1972-1973): Aktenvermerk über Gespräche zwischen Diplomaten der Botschaft der DDR in Korea und Diplomaten sozialistischer Staaten in Korea**, Brief von Willi Stoph an den Präsidenten der KVDR und Vorsitzenden des Zentralen Volkskomitees der KVDR Genossen Kim Ir Sen (09.03.1973)

50) **PA AA M 34/60888 (1984-1986):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KDVR-DDR**;

PA AA M 34/7208 (1984-1987): Konsultationen und Erfahrungsaustausch der MfAA;

PA AA M 34/59188 (1985-1986): Gesprächsvermerke;

PA AA M 34/61288 (1985-1987): Beziehungen auf Gebiet Rohstoffindustrie, Binnenhandel, Landwirtschaft;

PA AA M 34/263990 (1986-1987): Jahresorientierungen;

PA AA M 34/70989 (1986-1988): Leiterbriefe aus Phjöngjang;

PA AA M 34/263690 (1986-1989): Beschlüsse, Gesetze, Erlasse und Verordnungen der Staatsführung

2. 북한과의 경제 협력

이미 서술하였다 시피 동독의 대북정책은 특히 초기 단계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동독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불과했다. 이후 북한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은 1975년 이전까지 지속되면서 양국의 경제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51] 김일성은 1977년 12월 호네커의 북방 때 상환 지연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 동시에 동독의 관심사인 비철금속 채굴에 협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동독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하고 북한은 인력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담화를 나누었다.[52]

1980년 7월 28일, '동독과 북한 간의 1981년 상품 상호 조달에 관한 의정서 협상 이행 지침'에 따르면 이 협상의 기반이 되는 이전 협정들이 나열되어 있다.

"*협상의 기반은:*

-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각료 회의, 동독 정부와 북한의 관련 정부 간의 경제 및 과학 및 기술 문제 자문 위원회의 결의 행동 계획;

- 1977년 12월 11일 경제 및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동독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협정;

- 1978년 7월 10일의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물품의 상호 공급에 관한 장기 협정;

- 1978년 12월 16일의 지불에 관한 동독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협정;

- 개정을 포함한 기존 신용 계약 및 약정"이었다.[53]

---

51) 양국 무역량을 위해 참고: **PA AA M 1-C/31678 (1969-1974):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KVDR**, Sozialökonomische Analysen der KVDR 1971 und 1972

52) **PA AA M 1-C/6920 (1976-1979) Beziehungen zwischen der DDR und der KDVR**, Bericht über den offiziellen Freundschaftsbesuch der Partei- und Staatsführung der DDR unter der Leitung von Erich Honecker vom 8.- 11. Dezember 1977 in der KDVR

53) **PA AA M 34/201583 (1980-1982):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DDR-KDVR,** Direktive für die Durchführung der Verhandlungen über das Protokoll über gegenseitige Warenlieferungen 1981 der DDR und der KDVR

1981년 3월 17일에는 "*박사 동지 슈비자우(Schwiesau)는 동독이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사무총장과 동독 국무원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동지가 이끄는 당과 국가 대표단의 방문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을 평가했다.*"[54]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어서 "*[...]한편 동독 측은 1981년 1월 베를린에서 열린 장기 경제협력에 관한 제1차 회담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전망과 양국 경제에 유익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시작으로 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에리히 호네커 동지를 주재로 하는 당과 국가대표단의 방문으로 다져진 경제정치적 협력의 견고한 토대를 강조하시며 이 발전을 힘차게 다져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시였다. 이는 사회주의국가들과 개도국들과의 호혜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무역발전노선과도 일치한다."[55]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호네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1977년 12월 11일에 맺은 협정을 통해 1980~1982년 동독·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협상이 예정되었고 이는 1980년까지 이어졌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현황에 대해서*

2) 자동화 설비 공장 시운전 조치에 대해

3) 아닐론 방적공장(Anilonspinnerei) 건설 대책에 대해

4) 1982~1983년 양국 간의 물품 조달 계획에 대해

5) 제19차 과학기술협력 소위원회 회의 결과

(28.07.1980)

54) **PA AA M 34/201583 (1980-1982):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DDR-KDVR,** Vermerk zum Gespräch anlässlich des Antrittsbesuches des Botschafters der DDR in der KDVR, Genossen Dr. Schwiesau, beim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KDVR und Vorsitzenden der KDVR-Seite des Beratenden Ausschusses DDR/KDVR, Genossen Kim Gjong Rjon, am 17.3.81 von 12.00-12.50 Uhr im Haus des Ministerrates der KDVR (17.03.1981), S. 2

55) **PA AA M 34/201583 (1980-1982):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DDR-KDVR,** Vermerk zum Gespräch anlässlich des Antrittsbesuches des Botschafters der DDR in der KDVR, Genossen Dr. Schwiesau, beim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KDVR und Vorsitzenden der KDVR-Seite des Beratenden Ausschusses DDR/KDVR, Genossen Kim Gjong Rjon, am 17.3.81 von 12.00-12.50 Uhr im Haus des Ministerrates der KDVR (17.03.1981), S. 3

6) 장기적인 경제협력에 대해 양국의 기획 기관이 협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7) 제8차 자문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대해"[56]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대북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호네커와는 달리 다른 동독 관계자들은 대북경제협력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이는 다음 제2절 2번(북한과의 외교관계 평가)에 다룰 것이다.

3.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1955년 1월 27일 동독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협정으로 시작되었다.[57] 동독과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수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동독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고자 했고, 동독은 이 협력을 통해 북한에서의 자국의 명성을 높여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58]

그러나 과학·기술 회의의 협상과 결의에서 동독과 북한은 비용 규제 문제에서 충돌했다. 예컨대 1967년 과학·기술에 관한 제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60명의 북한 기술자들이 동독에서 몇 개월 동안 교육(*Ausbildung*)을 받는 내용의 결의가 통과되었고 동독은 모든 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을 주장했지만, 북한이 이를 반대하면서 1인당 월 100마르크를 주장하였다.[59]

동독은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어쨌든

---

56) **PA AA M 34/201583 (1980-1982):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DDR-KDVR,** Tagesordnung zur VII. Tagung des Beratenden Ausschusses DDR/KDVR

57) **PA AA M 1-A/9855 (1953-1955): Außenpolitische Beziehungen, Handelsbeziehungen, Protokollarische Angelegenheiten, Glückwünsche**

58) **PA AA M 1-A/17631 (1956-1957): Beziehungen zwischen der DDR und Korea**; Schriftwechsel Informationen zu Fragen der politischen und ökonomischen Beziehungen zwischen beiden Staaten (11.04.1957)

59) **PA AA M 1-C/102973 (1965-1969): Besuch verschiedener Delegationen Nordkoreas in der DDR**; Delegation der DDR in der Standigen Kommission fur WTZ DDR und KVDR (05.02.1968)

기술을 전수해주는 대신에 동독도 이에 대한 보상을(비철금속)을 바랐는데, 북한은 동독이 비용적인 부분을 거의 일방적으로 부담해 주기를 바랐으며 자주 개최되었던 위원회 회의에서 동독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다.[60]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1970년대까지 유지되었다가 동독이 더 이상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체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양국 간 교류협력은 1977년 호네커의 북방을 기준으로 새로운 방면을 맞는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협정을 다시 맺었으며, 협정 제목에서부터 '양국'이 강조되어 북한에 대한 협력의 상호작용이 요구되었다[61]

과학·기술 분야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1980~1990년대 기술 특허 문제로 인해 북한도 더 협력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1984년에는 김일성의 동독 방문을 통해 협정이 1990년까지 다시 연장되었다.

양국 간 협정(1984년 6월 1일)은 계속된 합의를 통해 1988년까지 계속 서신이 이어졌고 협정 내용과 서신에는 북한 측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 동독의 시설, 노하우 배분 가능성 및 생산 기술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다.[62]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동독에게 북한은 역시 좋은 협력파트너는 아니었으나 동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력관계에 메리트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동독·북한 협력: 1980~1990년

60) **PA AA M 1-C/102973 (1965-1969): Besuch verschiedener Delegationen Nordkoreas in der DDR**; Delegation der DDR in der Standigen Kommission fur WTZ DDR und KVDR (09.05.1969)

61) **PA AA M 1-C/6909 (1972-1979): Vorbereitung und Abschluß von Arbeitsplänen sowie eines Abkommens über Zusammenarbeit auf wissenschaftlichem Gebiet zwischen der DDR und der KDVR**, Abkommen über die Entwicklung der wirtschaftlichen und wissenschaftlichtechnischen Zusammenarbeit zwischen der Regierung der DDR und der Regierung der KVDR

62) **PA AA M 34/264890 (1986): Verträge und Abkommen**

1. 호네커의 공식 북한방문

호네커의 1977년 북방은 양국 외교관계의 전환점이었다.[63] 양국 대표단과 국가주석들이 국가 및 당 차원에서 양자 관계의 발전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 교환했다. 특히 동독 측에서 사전에 국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준비했다. 여기에는 우호 조약의 체결과 당 관계를 지방 단위로 확대하자는 내용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전문 부서 간에 정기적으로 경험을 교환해야 하며, 자문회의 개최하고 대표단 방문을 확대할 내용이 포함 되었다.

전반적으로 '동독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발전에 관한 협정'에 기록된 우호 방문 결과는 북한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1978~1984년에는 장기 무역 협정[64]과 같은 추가 조치가 결정되어 원재료 소결 마그네사이트의 양을 매년 증가시켰다. 또한 1966년 2월과 1972년 3월 협정에서 이미 부여된 8,400만 마르크의 대출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야금, 화학, 전자 및 자동화, 경공업 및 식품 산업 분야의 장비 및 기계 공급에 사용했다. 상환은 마지막 배송이 발송된 날로의 1년 후부터 2%의 이율로 연 10회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연간 대출 상환액의 35%를 비철금속 및 흑색금속 납품 형태로 충당할 수 있었다. 1977년부터 1979년까지 6,460만 마르크의 대출금이 부여되었고 이를 위해 제공된 전해 아연, 은 및 카드뮴 공급은 다음 연례 무역 협정에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1979년 말까지 상환했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상환도 1980~1985년으로 연기되었다(제5조). 제4조와 제5조의 조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악화된 북한의 재정난을 여

---

63) Kang-Schmitz, Liana. 2011. *Nordkoreas Umgang Mit Abhängigkeit Und Sicherheitsrisiko Am Beispiel Der Bilateralen Beziehungen Zur DDR*. Berlin Epubli Gmbh. 및 이경석, and 김경미. "냉전기 북한-동독의 외교관계(1953~1989): 협력과 갈등." *유럽연구* 34, no. 3 (2016): 149-80. 참고

64) PA AA M 34/24587 (1980-1985): Wirtschaftliche ZA DDR-KDVR;
PA AA M 34/26087 (1980-1987): Bez. DDR-KDVR Wissenschaft und Forschung

실히 보여주고 있다.

호네커의 북방 직후 우호 조약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협상은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82년에 조약 전문과 조항에 대한 초안이 잡혔었지만 1984년까지 협상은 계속되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지속된 이유는 함께 추구할 대외정책에 대하여 '세계 평화와 안보' 혹은 '제국주의에 맞서하는 투쟁'이 기본노선으로 세울지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은 전자를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길 원했던 반면에 북한은 후자를 원했다.[65] 1984년 김일성의 답례 방문 때 조약이 서명되었고 김일성은 호네커에게 중국 또한 소련과의 관계회복에 대한 의사를 밝혔으며, 호네커가 소련과 중국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언급했다.[66]

그 외 양측에서 전반적으로 동독·북한 양국관계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 담화를 나누었으며 경제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심화된 협력을 원했다. 김일성은 특히 동독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67]

북한에게는 동독의 기술 전수가 주요 이익이었으며, 동독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독이 의존하였던 '비사회주의경제 지역(*Nichtsozialistisches Wirtschaftsgebiet*)'의 수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우호조약 체결 후 양국 간 국교가 더 활발해지고 심화되었다는 것은 경제 및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양측 대표단이 꾸준히 회의를 진행했으며, 1986년에는 호네커의 북한 재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

65) **PA AA M 34/21587 (1980-1983): Grundfragen der Außenpolitik, Kampf um Frieden,** Fortschreibungsinformation "Die Haltung der PdAK zu Grundfragen der internationalen kommunistischen Bewergung" (20.08.1980)

66) "Gespräch Erich Honeckers mit Kim Il Sung in Berlin (30. Mai 1984)" n.d. www.argus.bstu.bundesarchiv.de. Accessed July 8, 2021. http://www.argus.bstu.bundesarchiv.de/dy30bho/mets/dy30bho_2460/index.htm.

67) "Gespräch Erich Honeckers mit Kim Il Sung in Berlin (01. Juni 1984)" n.d. www.argus.bstu.bundesarchiv.de. Accessed July 8, 2021. http://www.argus.bstu.bundesarchiv.de/dy30bho/mets/dy30bho_2460/index.htm.

필자는 간단한 개요를 위하여 외교문서에 기반해 호네커 집권 시기 동독이 북한과 맺은 주요 교류를 정리하여 기록했다(표 1 참고).

[표 1] 호네커 집권 하 북한과의 주요 교류[68)]

1971.02.05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 협력 협정
1971.09.28	민사, 가족 및 형사 문제에 관한 법적 관계에 관한 계약
1973.05.04	동독·북한 정부 간의 우편 및 통신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1973.11.09	동독·북한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문제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1974.03.30	동독·북한 농업과학아카데미와 간의 협력에 관한 합의
1975.05.12	학생과 대학 졸업생의 상호 입학 및 훈련에 관한 정부 간 합의
1977.12.08.~11	호네커의 공식 북한(우정) 방문
1977.12.11	동독·북한 간의 영사 조약
1977.12.11	동독·북한 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개발에 관한 합의
1978.04.10	동독·북한 정부 간의 교육문서와 동독·북한에서 발행되거나 수여된 학력 및 직함의 동등성에 관한 보고서
1978.07.10	동독·북한 정부 간의 수년간 물품상호제공에 대한 협정 1979~1984년
1978.10.09	동독·북한 정부 간의 의료분야 협약
1978.10.30	동독·북한 정부 간 항공운송계약
1979.03.09	동독·북한 정부 간의 문화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합의
1984.06.01	동독·북한 간의 우호협력에 관한 조약
1984.06.01	1990년까지 동독·북한 정부 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발전에 관한 합의
1984.07.	기계공학, 전기공학 및 전자분야에서 1984~1990년 동안 동독·북한 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을 심화시키는 계획
1985	1986~1990년 동독과 북한의 외무성 간의 협력계획
1985.10.	1986~1990년 동안 국가경제계획 조정에 관한 의정서
1985.11.	1986~1990년 기간에 걸친 장기무역협정
1986.01.01	1986~1990년 동독·북한 정부 간의 수년간 물품상호제공 계약
1986	1987~1990년 동독·북한 정부 간의 문화 및 과학협력계획
1986.20.18~21	호네커의 북한(우정) 방문

68) PA AA M34/61088 (1980-1986): Außenhandel DDR-KDVR

1988.09.22	동독·북한 정부 간의 동독에서 조선인민군 간부 훈련 및 추가 교육에 관한 합의

2. 북한과의 외교관계 평가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평가는 호네커에 의해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동독은 비사회주의경제지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외교국가로서 무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수식어와는 달리 동독의 고위 관계자 간의 서신 혹은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인정하지만, 북한 측이 협상에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제2절 2번에서 북한에 대한 공통된 평가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들을 인용한다.

1980년 5월 5일, 주 북한 동독 대사 야르크(*Dietrich Jarck*)가 사통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부장 빙켈만(*Egon Winkelmann*)과 동독 외무성 차관 크롤리코프스키(*Herbert Krolikowski*)에게 서신을 보면, 북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나온다. 북한은 남한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거부하며 대외정책의 우선 목표가 자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정책에 동의하는 국가들과 국교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 북한 동독 대사관이 1970년대부터 북한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69]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은 많은 서신에서 언급 된다. 예컨대 1981년 10월 1일 12쪽 서신에서 주 북한 동독 대사 슈비자우(*Herbert Schwiesau*)가 다음과 같이 동독 외무성 차관 크롤리코프스에게 북한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북한의 태도를 비판한다.:

"*[...]소련과의 관계는 북한에게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도달한 경제수준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를 더 발*

69) **PA AA M 34/190084 (1980-1982): Leiterbriefe aus Phjöngjang,** Informationsbrief (05.05.1980)

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는다. [...]특히 비동맹 국가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초강대국과 패권의 해로운 역할'에 대한 북한의 주요 대표자들의 발언이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에게 서유럽 국가 중에서도 서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비밀 회보(Vertrauliche Bulletin)'의 보다 광범위한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게 서독 이해당사자와의 연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베를린에서 돌아온 이후로 북한은 우호 조약과 외무성 간의 협력 계획에 대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경제관계는 여전히 매우 복잡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화 설비 공장을 두고 북한과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독의 의도를 거짓으로 치부한다. 북한 측에서는 동독의 부정확을 이용하여 공장 시운전 지연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안주(시)의 아닐론 방적 공장을 위한 아직 시작되지 않은 납품 및 장비에 대한 분쟁도 있다. 대외 무역의 결과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합의된 납품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동독의 수입에는(북한에 의해) 상당한 납품 지연이 있다."[70]

1981년 10월 5~8일에는 동독·북한 정부 차원 제6차 '경제 및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위원회 개최와 자문위원회의 결과로 보고서 서명(북한 국무회의 부의장 공진태, 동독 국무회의 부의장 라이헬트(H*ans Reichelt*))에 대해 보고하고 그 동안이 있었던 북한 측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야기한다.[71]

1981년 12월 12일, 동독 외무성 차관 크롤리코프스키에게 주 북한 동독대사 슈비자우가 보낸 편지에서 북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국내정치 상황은 안정적이다. [...]조선로동당의 제6차의 결의안을 구현하기*

---

70) 북한의 현황보고를 제외한 동독 외교부 차관 크롤리코프스키가 마킹한 부분 위주로 인용을 함축했다. **PA AA M 34/190084 (1980-1982): Leiterbriefe aus Phjöngjang,** Informationsbrief (01.10.1981)

71) **PA AA M 34/201583 (1980-1982):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DDR-KDVR,** "Protokoll der VI. Tagung des Beratenden Ausschusses der Regierung der KDVR und der Regierung der DDR fuer wirtschaftliche und wissenschaftlich-technische Fragen unterzeichnet" (09.10.1981)

위한 노력은 산업 및 농업 생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연초에 발생하여 1분기 내내 지속되었던 경제에 대한 원자재 및 전기 에너지 공급의 복잡한 상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높은 작업 강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산업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다."[72]

1982년 5월 3일, 동독 외무성 차관 크롤리코프스키에게 주 북한 동독 대사 슈비자우가 보낸 편지에서:

"*산업계의 기획 시작은 자재 및 원자재 재고가 생성되어 1981년 초보다 양호하다. [...]동독과의 양자 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여전히 크다. [...]외무성 간 협력 방안 서명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북한의 외무성은 우호 조약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을 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대외 무역 관계에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1980/81년의 납품 잔고를 단기간에 완전하게 복구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북한에 의해 매우 느리게 충족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상품을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독·북한 거래량의 추가 감소를 배제할 수 없다.*"[73]

1982년 5월 3일, 동독 외무성 차관 크롤리코프스키에게 주 북한 동독 대사 슈비자우가 보낸 편지에서:

"*[...]이론과 실천에서 북한은 실존사회주의(realer Sozialismus)에서 더 멀리 이동한다. 경제정책은 [...]여전히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지 않고 [...]주로 주관적 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의 외무장관 허담은 "독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조국의 통일을 주장하는 반면 독일 동지들은 독일의 분단을 원한다"고 주장했다.*"[74]

1982년 11월 5일, '소련 외무부 자문을 위한 작업'이란 제목으로 소련 외무부 자문을 위한 보고서에서 '북한 국내정치적 상황', '주체사상에 대

---

72) 인용된 서신은 8쪽이며, 북한의 현황보고를 제외한 동독 외교부 차관 크롤리코프스키가 마킹한 부분 위주로 인용을 함축했다. **PA AA M 34/190084 (1980-1982): Leiterbriefe aus Phjöngjang,** Informationsbrief (12.12.1981)

73) 동독 외무성 차관 크롤리코프스키가 마킹한 부분 위주로 인용했다. **PA AA M 34/190084 (1980-1982): Leiterbriefe aus Phjöngjang,** Informationsbrief (11.03.1982)

74) 동독 외무성 차관 크롤리코프스키가 마킹한 부분 위주로 인용을 함축했다. **PA AA M 34/190084 (1980-1982): Leiterbriefe aus Phjöngjang,** Informationsbrief (03.05.1982)

하여',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동독과 북한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평가' 등 전반적인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한 평가가 있다.[75]

북한이 점차 안정된 사회주의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칭찬으로 시작하여 주체사상과 김일성, 더 나아가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표한다(1쪽). 북한의 경제성장과 북한이 발표한 성장지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다음과 같이 "*[...]경제의 기획 및 관리에 있어 경제적인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큰 문제가 있다.*" 판단한다.

북한 대외정책의 주된 동기는: "*[...]조국의 평화통일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주의 및 기타 비동맹국가의 남한과의 수교를 방지하고 비동맹운동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며 북한을 위한 최대한의 경제적, 과학 및 기술 지원을 동기로 한다.*"고 판단하며, "*북한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개념의 이론적 근거는 우리의 현시대의 성격을 '비동맹국과 함께 하는 인민의 자립성과 독립을 위한 투쟁시대('주체시대')라는 잘못된 평가에서 비롯된다.*"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동독의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평가는 보다 긍정적이다.:

"*동독은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외세의 개입 없는 조국의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찬동한다. 동독은 남한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한다. 남한과 공식적인 국교는 없다.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으로 동독에게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동독 대표가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기구 행사에 참가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남한 시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남한과의 모든 거래는 남한과의 공식적인 국교가 있다는 오해를 유추할 수 없게끔 이루어진다.*

호네커 동지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우정과 협력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협상은 금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비철금속 반제품, 소결 마그네사이트 및 통조림 야채에 대한 1980년과 1981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의 상당한 납품 잔고는 대외 무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

75) PA AA M 34/22587 (1979, 1982-1984): Botschaft DDR-MfAA KDVR, Zuarbeit für eine Konsultation im Außenministerium der UdSSR (05.11.1982)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잔류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극동 부장과 북한 동독 대사 간 편지교류를 통해 북한이 계약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계획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76]

초기에 동독 입장에서 북한과의 외교정책은 소련과의 의무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련과의 종속관계가 느슨해지면서 호네커 집권시기에는 북한을 중요한 외교국가로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1980~1990년: 조약 재체결, 문화 사업

동독의 국제협력부(*Abteilung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문서를 참고하면 양국에서 조약 재체결[77]과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동독 측에서 진행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계획 위원회 차관이자 북한과의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담당자인 뮬러(*Harry Müller*)가 주 동독 북한 대사 박현보와

---

76)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서신 교환을 들 수 있다: **PA AA M 34/189984 (1980-1982): Leiterbriefe nach Phjöngjang:** Leiterbrief vom Staatssekretär, Dr. Herbert Krolikowski an den Botschafter der DDR in der KDVR, Karl-Heinz Kern (08.12.1982); **PA AA M 34/189984 (1980-1982): Leiterbriefe nach Phjöngjang:** Leiterbrief vom Staatssekretär, Dr. Herbert Krolikowski an den Botschafter der DDR in der UdSSR, Dr. Egon Winkelmann (02.12.1982); **PA AA M 34/189984 (1980-1982): Leiterbriefe nach Phjöngjang:** Leiterbrief vom Staatssekretär, Dr. Herbert Krolikowski an den Botschafter der DDR in der KDVR, Karl-Heinz Kern (12.11.1982); **PA AA M 34/189984 (1980-1982): Leiterbriefe nach Phjöngjang:** Leiterbrief vom Staatssekretär, Dr. Herbert Krolikowski an den Botschafter der DDR in der UdSSR, Dr. Egon Winkelmann (nicht datiert); **PA AA M 34/189984 (1980-1982): Leiterbriefe nach Phjöngjang:** Leiterbrief vom Leiter der Abteilung Ferner Osten, Klaus Zorn an den Botschafter der DDR in der KDVR, Karl-Heinz Kern (nicht datiert); **PA AA M 34/189984 (1980-1982): Leiterbriefe nach Phjöngjang:** Leiterbrief vom Leiter der Abteilung Ferner Osten, Klaus Zorn an den Geschäftsträger a. i. der Botschaft der DDR in der KDVR, Klaus Barthel (23.09.1982);

77) **PA AA M 34/72890 (1983-1987):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ind. Kooperation**

나눴던 이야기들을 주 북한 동독 대사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 북한 측과 동독 측이 경제협력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북한 측은 원자재 관리 분야의 협력 제안을 극도로 꺼리고, 잔류아연, 납슬래그 분야의 경우처럼 기존 제안을 철회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 산업은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매우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북한에 신용으로 처리 산업에 있는 대량의 장비를 제공하고 나중에 이 공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관심이 없다. 우리가 오늘 비사회주의 경제지역(Nichtsozialistisches Wirtschaftsgebiet, NSW)에서 사야하거나 우리 스스로 높은 가격에 주문할 수 있는 북한에서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한 상품이 중요하다.*"(1983.11.10)

북한 측에서 하는 제안은 동독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라며 심지어 애초에 협력관계의 주된 관심사 원자재에 대한 약속은 철회했다고 격하게 불만을 표한다(5쪽). 박현보 대사와 뮬러와 경제협력에 대해 담화 나눌 수 있었던 배경은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가경제계획 1986~1990년 조정에 대한 협의 시작 개념을 확인했고 최초로 북한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4 장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친 동독의 국내·국제정치적 조건

본 장에서는 동독의 대외정책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한다. 동독의 대외정책이 가지는 성격과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동독의 이해관계로 인해 대북정책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제 1 절 동독 설립의 구조적 조건요인

1. 국제체제의 양극화 및 동·서독 간의 경쟁: 동독 설립 및 체제

의 종속

1949년 10월 7일 설립된 독일민주공화국은 1948년 10월 제정된 독일민주공화국헌법을 기반으로 건립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패전에 따른 독일 분단의 결과,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위상의 변화를 겪는다.

동독은 초기에 서독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유일한 독일 정부임을 주장했지만, 공산권 국가들 외 다른 구가들로부터는 국제적으로 주권국가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여 지속적인 체제 정당성의 위기를 겪었다. 전후 시기의 국제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간 갈등이 동독에게는 전체적인 의사결정의 틀과 장이 형성되는 배경이었다.[78]

서독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과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가입으로, 서독과 동독은 각각의 동맹체제에 포함되어 소련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점령지역인 동독은 초기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재(戰災)를 재건할 때 소련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소련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은 표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갖췄었다.[79] 이는 분단 초기에 전술적인 신중함에서 야기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적인 사회개혁은 점령지역인 동독에서 소련의 후원 아래 이행되었고, 통일독일(*Deutscher Einheitsstaat*) 또한 사회주의 모델에 따라 실현하길 바랐다. 동독의 이러한 연결기능은 동독의 지정학적 및 전략적 위치로부터 야기되었고 미국과 서구권과의 대립에서 공산군은 동독에서 중요한 주둔구역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모델에 따른 통일의 가능성이 감소하자 소련에게 동독은 서구권과 연결되는 징검다리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스탈린 노트(1952년 3월)에 강조된 것처럼 동독은 여전히 협상 카드로서의

---

78) Czempiel, Ernst-Otto. 1969. *Die anachronistische Souveränität: Zum Verhältnis von Innen- und Außenpolitik*. Edited by Ernst-Otto Czempiel. 1969th ed.

79)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21. Wiesbaden: Springer Vs,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80] 미국과 서독 간의 동맹관계가 강화되면서 서독의 재무장이 두려웠던 소련은 일를 막을 수만 있다면 자유선거에 의한 중립적인 통일독일을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의향이 있었다.[81]

이후 소련은 '두 국가 이론'을 주장하며 새로운 독일정책을 제시했었는데, 1955년 서독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하고 '제네바 3국 외무장관회담(*Genfer Außenministerkonferenz*)'이 실패하면서 중립적 독일에 대한 전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82] 동독의 존재 불안정 문제는 처음부터 소련의 경제적, 군사전략적 그리고 이념과 권력정치의 도구화로 인해 내재되어있었다. 이와 같은 동독의 기능적 의미가 패권세력인 소련의 이해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패전과 그에 따른 동서 대결의 산물로서, 동·서독은 동시에 동서갈등 구조 속에서 대외정책에서 패권의 통제를 받는 위성국가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속된 각 동맹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제한은 독립적인 대외정책 및 '독일문제'를 미국과 소련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포기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는 분단, 즉 두 개의 독일 국가 존재와 이에 따른 동·서독 간의 적대감 심화를 의미했다.

안보를 극대화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와(*Konrad Adenauer*) 울브리히트는 각자의 동맹국가와의 통합을 가장 시급한 정치적 목표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83]

본 절에서 동독 체제설립을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 중에 국제체제 양극화 가운데 동·서독 간 상이한 정치·경제적 체제의 우월성 경쟁 측면을

---

80) Bonwetsch, Bernd and Kudrjasov, Sergej. "Stalin und die II. Parteikonferenz der SED" In *Stalin und die Deutschen* edited by Jürgen Zarusky, 173-206.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14. https://doi.org/10.1524/9783486706338.173

81) von Schubert, Klaus. *Wiederbewaffnung und Westintegration*. STUTTGART: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10. https://doi.org/10.1524/9783486703634

82) Meier, Christian. *Trauma deutscher Außenpolitik : die sowjetischen Bemühungen um die internationale Anerkennung der DDR / Christian Meier*. Stuttgart-Degerloch: Seewald, 1968.

83) Amos, Heike. 2015.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Ziele, Aktivitäten Und Konflikte*. Vandenhoeck & Ruprecht.

서술하였고, 체제 유지와 존립에 대한 정당성 주장이 두 정부의 안보 관련 이해관계를 잘 나타낸다. 또한, 독일 이중 존재의 유지가 동독 체제의 안정성 문제 자체가 필수적으로 내재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동서 갈등구조와 공산권

1960년대 중반부터 미·소 간 적대적인 분위기가 완화되는 데탕트 시기에 접어듦에 따라 동독의 불안정 문제도 따라서 달라졌다. 호프만(Stanley Hoffmann, 1975)이 '완화된 양극화'[84]로 정의한 이 시기에는, 두 초강대국이 점차 경제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상호협력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했던 국제체제의 양극화는 일시적 및 부분적 상호 의존성에서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상호 의존성으로 전환되었다. 두 초강대국이 형성했던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상호 간 의존성의 성격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이외에 동·서구권 양측 모두에게 이데올로기적 전제는 정치적 행위의 기반으로서 상당히 중요했다.

제 2 절 동독 체제의 '존립' 조건 및 불안정 요인

1. 동독의 체제 도입: 체제 건립 및 사회개조

경제 관련뿐만 아니라 사통당의 전적인 통치권은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정당화되었으며,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공통된 가치로 통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울브리히트 집권기에서 호네커 집권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개혁보다는 유지의 성격이 더 우세했다.[85] 울브리히트 때부터 사회주의 이념의 강조와 동독 자국민의

---

84) Hoffmann, Stanley. 1975. *Probleme Der Theoriebildung. In Theorie Der Internationalen Politik - Gegenstand Und Method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edited by Helga Haftendorn. Hamburg: Helga Haftendorn.

85) Weber, Hermann. 1974. *Die SED Nach Ulbricht*. Hannover, Germany:

역사의식(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세한 것에 대한 선전)이 국내정치적 정당화와 체제공고화에 대한 필수적인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동독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공식적으로 소련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위성국가로서 소련의 지원과 지지받아야 했고, 이는 동독의 딜레마 중 하나였다. 대중정당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통당은 레닌주의 간부정당의 전형적인 조직 및 명령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86] 따라서 내부저항에도 불구하고 동독 설립 후 소련공산당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탈린주의 국가정당으로 기능했던 '새로운 유형의 정당(*Partei neuen Typus*)'(1948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공산주의 단일정당체제의 규칙이 수립되면서 의사결정권이 독점되었고, '위로부터의 혁명'을 촉진할 수 있었다.

사실상 단일 정당으로서의 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통당은 국가차원 및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을 주장했고 이를 사통당 법령(*Statut, 1954년*)에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에 의해' '독일 노동계급의 의식적이고 조직화된', '노동계급의 모든 조직, 노동자, 사회 및 국가조직을 지도하는 위세이며 사회주의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권위를 가졌다'고 표방했다.[87] 이러한 형식적인 이념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 특히 정치국의 통치권은 '과학적으로 계획되고 과학적 방법으로 실현할' 것을 의미했다.[88]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동독 자국민 탈주가 감소하면서 정치국 입장에서는 '일반 사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감에 따라 기술·경제 혁명의 이원론이 도드라졌다. 이념적 관료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가 충돌

Fackelträger Vlg.

86) Amos, Heike. 2015.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Ziele, Aktivitäten Und Konflikte*. Vandenhoeck & Ruprecht.

87) Thieme, Tom. "Vorreiter Wider Willen? Die SED-PDS-Elite Und Der Systemwechsel in Der DDR." *Zeitschrift Für Politik* 60, no. 3 (2013): 330-47. Accessed June 21, 2021. http://www.jstor.org/stable/43855070.

88) Thieme, Tom. "Vorreiter Wider Willen? Die SED-PDS-Elite Und Der Systemwechsel in Der DDR." *Zeitschrift Für Politik* 60, no. 3 (2013): 330-47. Accessed June 21, 2021. http://www.jstor.org/stable/43855070.

하는 것이었다.[89] 울브리히트가 새로이 추구한 것은 기존의 소련 모델과 다르게 사회주의식 능력주의(*meritocracy*) 및 소비사회 건립과 모든 생활 수준에서 '과학화'를 우선수위로 두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엘리트에 대항하는 새로운 엘리트 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사통당의 정치엘리트를 직업화시켰다.

제8차 당 대회 이후, 호네커에게 사회 변화과정에 대한 과학적 숙달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통당의 권력독점 확대와 결합될 수 있다면서 '조직적 경험을 가진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훈련된 모범노동자'[90]를 규정했다. 1976년의 새로운 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사통당의 리더십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의 선언이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당은 노동계급, 사회주의 국가 및 그 사회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도세력'인 것을 표방한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울브리히트의 스탈린화와 이후 호네커의 재편성까지의 구조조정 사이의 범위에서 소련 모델에 대한 사회구조적 시스템의 적응은 상당한 변동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체제불안정은 지속적으로 내제된 불안요소로 작동했었다.

2. 동·서구권 체제경쟁

유럽지역에서 냉전의 이데올로기 및 사회적 적대감은 동·서독 양자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분단문제에 의해 점차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동독은 자신을 서독의 사경제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으로, 더 나아가 '체제 설계의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으로 인해, 스스로를 진보적인 대안으로 간주했다.[91]

---

89) Heydemann Günther. 2003. *Die Innenpolitik Der DDR*. München: Oldenbourg.

90) Ludz, Peter C.. 1980. *Die DDR Zwischen Ost Und West : Politische Analysen 1961 - 1976*. München: Beck.

91)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SED: 1945 Bis 1971*. 1989. 3rd ed. Berlin,

동독 지도부가 서독에 대해 과한 경쟁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정반대였던 서독 사회를 동독 자국민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동독 자국민의 탈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92] 동독의 계획경제와 서독의 시장경제를 명확하게 분리해야했던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는 필수적이었지만, 각자 경제체제의 생산 및 수익성에 대한 성과 비교 측면에서는 동독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했다.

서독의 생활수준, 소비행태 및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동독은 자신의 '타자성 및 우월성(제5회 당 대회, 1958년)'을 증명하는 것에 점점 어려움을 느꼈다.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동독 자국민의 불만은 적절한 소비재 공급이나 보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쟁의식으로 인해 실행되었던 선전이나 사통당이 의도했던 서독정책 시행이 의도했던 기능을 펼치지 못했다.[93] 이러한 배경에서 동·서독 간의 관계는 다양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관계정상화' 보다는 '적대적 협력'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94]

냉전 갈등이 독일 영토에서 잘 반영되었으며 동·서독 간 관계가 이러한 공산권과 서구권의 이념대립의 지표와 촉진요인이라는 사실은 점차 뚜렷해졌다. 그 결과 동·서독 간 경쟁은 서독 측에서 유일한 독일정부임을 주장하는 것과 동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화되고, 동독도 마찬가지로 동독이 합법적인 국가임을 주장하여 독일 전체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건립을 목표로 한다고 선전한다. 동독의 주장은 서독과의 갈등에서 오로지 동독이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95]

Germany: Dietz Vlg Bln.

92) End, Heinreich. 1973.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 Internationale Dimensionen Des Innerdeutschen Konflikts 1949- 1972*. Köln.

93) Amos, Heike. 2015.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Ziele, Aktivitäten Und Konflikte*. Vandenhoeck & Ruprecht.

94) Scholtyseck, Joachim. 2003. *Die Aussenpolitik Der DDR*. München: R. Oldenbourg.

95) Ulbricht, Walter. 1962. *Das Nationale Dokument; Wortlaut Des Dokuments Und Der Rede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Walter Ulbricht Auf Dem*

1972년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동·서독이 국제무대에서 일치된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경쟁의식의 심화를 야기했다. 기존의 상호간 위협에 대한 인식과 국제구조에 대한 상이한 해석패턴이 여전히 존재했고 분단갈등은 영속화되었다. 따라서 공산권과 서구권의 체제경쟁으로부터 야기된 안정성과 안보 문제는 동독 체제의 필수적인 결정요소였다.

3. 동독 체제의 결점: 주권, 정체성 및 정당성 결손

3.1. 주권의 결손

동독의 불안정한 체제를 초래했던 것은 주권, 정체성 및 정당성의 부족이었으며, 이러한 결점들은 동독의 내부 및 외부 지위의 공고화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이다.

1949년 동독의 설립 직후 동독은 소련의 점령지역으로서 소련의 유럽정치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는 위성국가에 불과했고 소련의 점령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주권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공식적인 국가 주권에 대한 주장은 1954~55년에서야 가능했다. 소련의 독일정책 노선변경에 의해 기존의 중립적인 통일독일에 대한 필요성보다 동독의 국제법에 의한 독립적인 제2 독일 주권국가 위상이 유리했다. 그러나 소련이 동독에 대한 통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한 채 '새로운 품질(*Neuer Kurs*)'의 동독 대외정책은 여전히 소련, 즉 모스크바 지도부로부터 허가되어야 했다. 동독은 결과적으로 형식상 주권국의 지위를 가졌으나 소련의 동의와 지원 없이는 대외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 1964년에야 소련과의 우호 조약을 통해 점령 지역인 아닌 '동등한' 동맹국가로서 처음으로 양자협의 및 지원협정을 맺는다.

1974년 10월, 동독 헌법 개정 이후 동독의 주권 결손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동독은 이제 소련과 '영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제6조 2항)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유일하게 의존관계 수립한 국가였다.

Nationalkongreß. Berlin, Dt. Zentralverl.

동독은 '국제법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유지된 보호국의 새로운 변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의존성이 다시 합법화되었다.[96] 그러나 주권에 대한 인식은 사통당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존재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3.2. 정체성 결손

동독이 독일통일과 동구권, 더 나아가 공산권 통합 사이에서 처음부터 당면한 주요문제 중 하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정체성의 결점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독의 국가체제 안정화에 있어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위상을 해소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지면서 국제·외교적 인정을 위한 노력 강화로 이어졌다. 즉, 이러한 노력의 주된 목적은 할슈타인 독트린에 따른 서독의 봉쇄정책에 대해 동독의 결여된 정체성과 국제법에 의한 주권국가로서의 인정 결여를 극복하는 것[97]이었고, 이를 외교정책으로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동구권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국가들이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에도 국제법에 따른 공식적인 인정은 1972~73년까지 얻지 못했다.

분단으로 인한 사회주의권 내 동독 정부의 잠정적인 성격은 동독 사회에서 정체성 부족을 증가시켰다. 동독 자국민은 서독 자국민과의 민족적 공통성을 인지[98]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통당 정치국에게 서독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자국민의지지 혹은 거부를 초래할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요소였다. 그리하여 사통당 정치국은 동독 자국민의 서독과의

---

96) Mampel, Siegfried.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Text und Kommentar*. 3. völlig neu bearb. Aufl. Frankfurt a. M: Metzner, 1972.

97) End, Heinrich. 1973.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 Internationale Dimensionen Des Innerdeutschen Konflikts 1949- 1972. Köln.

98) Szalai, Wendelin. 1997. Wie „Funktionierte" Die Identitätsbildung in Der DDR?. In *Identitätsbildung Und Geschichtsbewußtsein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58 - 108. Weinheim: Deutscher Studienverlag.

교류를 최대한 단절시키고, 동독 국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동독 정치 체제의 보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제한하는 방식을 대응했다.

동독 자국민의 서구적 지향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과 사회주의 체제가 실제로 제공하는 낮은 생활수준 사이에서 오는 괴리에서 초래되었다. 사통당은 일반적인 고립과 상대적 번영 사이의 타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제를 제공해야만 사회 전체의 안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은 또한 사통당이 자국민과 했던 타협의 방향이었다. 그리고 제8차 당 대회가 끝난 후 생활수준을 높여 동독 체제에 대한 자국민들의 충성도를 높이고자 했던 사람은 호네커였다. 결과적으로 사통당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은 두 가지 요소의 대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동독 사회질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대한 혁명적 주장과 다른 하나는 안정 지향적 사회통합의 필요성 제기였다.

3.3. 정당성 결손

동독 지도부에게는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위해 자국민의 일반적인 지지가 필연적이었고 그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1940~1950년대부터 동독 자국민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펴하고 있었고, 동독을 소련의 '대리국가'로 인지하면서 국제적인 고립 또한 사통당과 자국민의 관계에 주요한 갈등 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맥락에서 사통당이 주장했던 정당성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혁명'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외부로부터의 통치'[99]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통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을 통해 유일한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를 희망했지만 동독 국민은 이러한 유형의 일당체제를 스탈린주의식 정치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참여권리가 통제된 것으로 인식

99) Günter Heyden, and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UdSSR. 1976. *Ideologie Des Sozialdemokratismus in Der Gegenwart*. Berlin: Staatsverlag Der Deutschen Republik.

해 꾸준히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100] 따라서 사통당은 '독일 노동자의 사회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101]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합법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사통당을 안심시키는 요소였지만, 억눌린 국민의 반감은 통제되지 않는 '반항'의 위험이 있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3년 동독 봉기가 있다. 동독 국민에게 강요되었던 충성도는 체제 안정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으로부터의 '동의'에서는 정당성이 파생될 수 없었다. 동독 자국민의 체제에 대한 '동의'는 '적응' 혹은 '체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102] 그나마 국민으로부터의 정당성 결여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이 생활 수준 향상이었다.

다차원적이고 역학적인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된 후에도 호네커 집권기에 사통당은 안보에 대한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통치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더더욱 필요로 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왜 동독이 굳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는지,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 동독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왜 돌연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

100) Meuschel, Sigrid. 1992. *Legitimation Und Parteiherrschaft : Zum Paradox von Stabilität Und Revolution in Der DDR 1945-1989*. Frankfurt Am Main: Suhrkamp, Cop.

101) Hermann Weber. 2012. *Die DDR : 1945-1986*. München: Oldenbourg.

102) Jarausch, Konrad H. "Realer Sozialismus Als Fürsorgediktatur. Zur Begrifflichen Einordnung Der DDR [1998]." Historical *Social Research / Historische Sozialforschung. Supplement*, no. 24 (2012): 249-72. Accessed June 1, 2021. http://www.jstor.org/stable/41637876.

까닭은 일견 동독에게 북한은 지정학적인 의미가 미미해 보이고, 중·소의 이념갈등 중에 북한의 균형전략으로 인해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동독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며, 부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이 양국이 맺은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네커 집권기에 북한에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의 관계변화가 관찰된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본 연구의 주장은 먼저, 동독도 북한과의 외교관계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한국전쟁 이후인 1960년대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되었고, 이때부터 북한이 동독과 체결한 조약에서 동독에게 납부하기로 약속되었던 그리고 동독이 원했던 원자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호네커 시기 활발해진 이유로는 첫째로 동독과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북한의 태도와 동독이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활발한 관계가 동독의 체제현상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독도 북한과의 외교관계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제한된 외교활동 범위를 고려하면 관계유지를 넘어서 외교사업 시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동독의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동독이 생각한 국제사회주의는 '상호간의 친선, 호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성과와 이익 및 목표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그 외에도 비사회주의경제지역으로부터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이 주장하는 서독과 서구권보다 우세하다는 사회주의국가로 이념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체제붕괴를 피하기 위해 공산권이 번영하길 바랐던 점 또한 북한이 동독에게 무시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었던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동독에게는 사회주의체제를 현상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다. 필자가 외교문서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동독 정치국에게는 북한은 어려운 협상 상대였지만 북한이 동독과의 수교에 매우 관심을 거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독과의 협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므로 동독이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크게 만족하다기 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관계유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조약의 내용을 지키려 노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동독 측은 여러 차례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다만 울브리히트 집권기에는 두 동맹국가 간의 연대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된 반면, 호네커 시기에는 동독이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공산권 내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를 원만히 이어나가길 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북한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고위관계자들 간의 교환되었던 서신과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김일성과 호네커가 나눴던 담화에서도 이러한 호네커의 의사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동독에게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 지속한 관계이기도 하며, 동독은 북한을 통해 중국과 소련 간의 이념갈등을 중재하고 싶어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동독 측 고위관계자들이 작성한 두 국가주석들이 나눈 담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미 울브리히트 집권기에 북한과 아시아 지역이 동독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독은 체제 안정화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북정책을 대외정책의 일부로 최대한으로 이용하였다. 동독은 이미 오래 유지되었던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살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독 고위관계자와는 달리 호네커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 점은 주 북한 동독 대사와 동독 외무성 차관 간의 서신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이전에는 북한이 동독의 외교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사회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공통점이 많았지만 동독은 북한 보다 사회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국가였다. 이것은 동독이 이 구성에서 기증자 역할을 맡은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동독은 북한의 협력에 있어 비협조적인 태도와 의무사항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던 북한과 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더 확

장해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다.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까지 동독의 대외정책에 관해 이루어진 소수의 선행연구도 주로 동독과 서독의 관계와 소련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 동독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연구의 초점이 북한의 입장에서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동독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이익을 목표로 두고 관계를 유지했던 것뿐만 아니다. 동구권과 더 나아가 고산권의 국가들을 체제에 통합하려는 국제사회주의 의식을 서독에게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결과이다.

이 논문을 참고로 하여 동독과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가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의 외교정책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동구권을 넘어서 공산권 내에서 각각 사회주의국가들이 어떠한 위협요소를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연구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어

성상환. "북한과 구동독의 외교관계에 대한 분석적 고찰 -1950년에서 1960년까지의 독일외무성사료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49(49), 2010, 399-421.

김면. "독일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과 구동독간의 경제협력 -구동독의 함흥시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7, no. 1 (2003): 83.

이경석, and 김경미. "냉전기 북한-동독의 외교관계(1953~1989): 협력과 갈등." *유럽연구* 34, no. 3 (2016): 149-80.

2. 독일어

Bayerische Staatsbibliothek-Digitale Bibliothek, Münchener Digitalisierungszentrum. n.d. "Zusammenfassung Egon Bahr, Wandel Durch Annäherung. Rede in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Tutzinger Rede], 15. Juli 1963 / Bayerische Staatsbibliothek (BSB, München)." 1000Dokumente.De. Accessed June 4, 2021. https://www.1000dokumente.de/index.html?c=dokument_de&dokument=0091_bah&l=de.

Bonwetsch, Bernd and Kudrjasov, Sergej. "Stalin und die II. Parteikonferenz der SED" In *Stalin und die Deutschen* edited by Jürgen Zarusky, 173-206.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14. https://doi.org/10.1524/9783486706338.173

Böhme, Hans. "Gebrauchswert Und Preispolitik Im 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 – Untersucht Am Beispiel Der DDR."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06 (1971): 78-127. Accessed June 21,

2021. http://www.jstor.org/stable/40437610.

Buch, Günther. 1987. *Namen Und Daten Wichtiger Personen Der DDR*. Berlin: J.H.W. Dietz.

Busse, Hartwig, and Klaus Lingner. *Sozialismus und Frieden / Hartwig Busse ; Klaus Lingner*. 2., überarb. Aufl. Berlin: Staatsverl. d. DDR, 1973.

Conrad, Thomas, and Berthold Schwark. 1986. "Methodologische Und Inhaltliche Probleme Der Marxistisch-Leninistischen Philosophiegeschichtsschreibung in Der DDR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34 (3). https://doi.org/10.1524/dzph.1986.34.3.263.

Czempiel, Ernst-Otto. 1969. *Die anachronistische Souveränität: Zum Verhältnis von Innen- und Außenpolitik*. Edited by Ernst-Otto Czempiel. 1969th ed.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SED: 1945 Bis 1971. 1989. 3rd ed. Berlin, Germany: Dietz Vlg Bln.

Francisco, Ronald A. "Drei Volksdemokratien: Ein Konzept Kommunistischer Machtstabilisierung Und Seine Verwirklichung in Polen, Der Tschechoslowakei Und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Deutschlands, 1944-1948. Wolfgang Diepenthal."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49, no. 3 (1977): 519 - 521.

Frank, Rüdiger. 1996. *Die DDR Und Nordkorea : Der Wiederaufbau Der Stadt*

Frei, Daniel, and Dieter Ruloff. "ENTSPANNUNGSERWARTUNGEN UND ENTSPANNUNGSFOLGEN: Eine Bilanz Anhand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Indikatoren." *Zeitschrift Für Politik*, NEUE FOLGE, 29, no. 3 (1982): 295-317. Accessed June 1, 2021. http://www.jstor.org/stable/24225519.

Georg Schwarzenberger, and Anneliese Herbst. 1955. *Machtpolitik -*

Eine Studie über di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Tübingen: Mohr.

Gottfried-Karl Kindermann, and Hans J Morgenthau. 1981. *Grundelemente Der Weltpolitik : Eine Einführung*. München: Piper.

Grabowsky, Volker. 1987. *Zwei-Nationen-Lehre Oder Wiedervereinigung? : Die Einstellung Der Partei Der Arbeit Koreas Und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Zur Nationalen Frage Ihrer Länder Seit Dem Zweiten Weltkrieg : Ein Vergleich*. Bochum: Brockmeyer.

Gumpel, Werner. "Der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Als Instrument Sowjetischer Hegemonie." *Osteuropa* 26, no. 11 (1976): 997-1006. Accessed June 21, 2021. http://www.jstor.org/stable/44907465.

Günter Heyden, and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Udssr. 1976. *Ideologie Des Sozialdemokratismus in Der Gegenwart*. Berlin: Staatsverlag Der Deutschen Republik.

Hacker, Jens. "DIE VÖLKERRECHTSWISSENSCHAFT IN DER DDR." *Die Friedens-Warte* 62, no. 1/4 (1979): 54-114. Accessed July 2, 2021. http://www.jstor.org/stable/23776647.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21. Wiesbaden: Springer Vs,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Heydemann Günther. 2003. *Die Innenpolitik Der DDR*. München: Oldenbourg.

Hoffmann, Stanley. 1975. *Probleme Der Theoriebildung. In Theorie Der Internationalen Politik - Gegenstand Und Method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edited by Helga Haftendorn. Hamburg: Helga Haftendorn.

Honecker, Erich, an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1971. *Bericht Des Zentralkomitees an Den VIII. Parteitag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VIII. Parteitag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Berlin, 15. - 19. Juni 1971. Berlin Dietz Verlag.

Jacobsen, Hans A. 1980. *Drei Jahrzehnte Aussenpolitik Der DDR : Bestimmungsfaktoren, Instrumente, Aktionsfelder*. München ; Wien: Oldenbourg.

Jarausch, Konrad H. "Realer Sozialismus Als Fürsorgediktatur. Zur Begrifflichen Einordnung Der DDR [1998]." Historical *Social Research / Historische Sozialforschung. Supplement*, no. 24 (2012): 249-72. Accessed June 1, 2021. http://www.jstor.org/stable/41637876.

Judt, Matthias. 1998. *DDR-Geschichte in Dokumenten : Beschlüsse, Berichte, Interne Materialen Und Alltagszeugniss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Kang-Schmitz, Liana. 2011. *Nordkoreas Umgang Mit Abhängigkeit Und Sicherheitsrisiko Am Beispiel Der Bilateralen Beziehungen Zur DDR*. Berlin Epubli Gmbh.

Krippendorff, Ekkehart. 1975. *Problem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 Essays*. Frankfurt A.M.: Suhrkamp.

Ludz, Peter C.. 1970. *Parteielite Im Wandel : Funktionsaufbau, Sozialstruktur Und Ideologie Der SED-Fuhrung. Eine Empirisch-Systematische Untersuchung*. Köln U.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Ludz, Peter C.. 1980. *Die DDR Zwischen Ost Und West : Politische Analysen 1961 - 1976*. München: Beck.

Mampel, Siegfried.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Text und Kommentar*. 3. völlig neu bearb. Aufl. Frankfurt a. M: Metzner, 1972.

Maretzki, Hans. 1991. *Kim-Ismus in Nordkorea : Analyse Des Letzten DDR-Botschafters in Pjöngjang*. Böblingen: A. Tykve.

Mayring, Philipp. 2015. *Qualitative Inhaltsanalyse : Grundlagen Und*

Techniken. Weinheim, Bergstr Beltz, J.

Meier, Christian. *Trauma deutscher Außenpolitik : die sowjetischen Bemühungen um die internationale Anerkennung der DDR / Christian Meier*. Stuttgart-Degerloch: Seewald, 1968.

Osadczuk-Korab, B. A. "Osteuropa Unterwegs Nach Belgrad: Folgen Der KSZE-Konferenz in Helsinki." *Osteuropa* 27, no. 5 (1977): 371-77. Accessed June 5, 2021. http://www.jstor.org/stable/44908251.

Osgood, Robert E. 1975. *Idealismus Und Egoismus in Der Außenpolitik. In Theorie Der Internationalen Politik - Gegenstand Und Method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edited by Helga Haftendorn, 52 - 68. Hamburg: Helga Haftendorn.

Schellhorn, Kai M. 1986. *Der Staat: Die Wichtigste Aktionseinheit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Schleicher, Ilona. "Zur "materiellen Solidarität" Der DDR Mit Dem ANC in Den 60er Jahren (On the 'Practical Solidarity' of the GDR for the ANC in the Sixties)." *Africa Spectrum* 27, no. 2 (1992): 213-17. Accessed June 2, 2021. http://www.jstor.org/stable/40174709.

Scholtyseck, Joachim. 2003. *Die Aussenpolitik Der DDR*. München: R. Oldenbourg.

Schütz, Gertrud. 1989. *Kleines Politisches Wörterbuch*. Berlin Dietz.

Senghaas, Dieter. 1988. *Konfliktformationen im internationalen System*. Berlin, Germany: Suhrkamp.

Siebs, Benno-Eide. 1999. *Die Aussenpolitik Der DDR 1976-1989 : Strategien Und Grenzen*. Padeborn ; Munchen ; Wien ; Zurich: Schöningh.

Sieger, Gerd Joachim. *Verfassung Der DDR : Text : Einführung Kommentar / Bearbeitet Von Gerd Joachim Sieger*., 1980.

Steiner, André. *Die DDR-Wirtschaftsreform der sechziger Jahre: Konflikt zwischen Effizienz- und Machtkalkül*. Berlin: Akad.-Verl,

1999.

Thieme, Tom. "Vorreiter Wider Willen? Die SED-PDS-Elite Und Der Systemwechsel in Der DDR." *Zeitschrift Für Politik* 60, no. 3 (2013): 330-47. Accessed June 21, 2021. http://www.jstor.org/stable/43855070.

Thomas, Rüdiger. 1982. *Modell DDR : Die Kalkulierte Emanzipation*. München: Hanser.

Ulbricht, Walter. 1962. *Das Nationale Dokument; Wortlaut Des Dokuments Und Der Rede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Walter Ulbricht Auf Dem Nationalkongreß*. Berlin, Dt. Zentralverl.

von Schubert, Klaus. *Wiederbewaffnung und Westintegration*. STUTTGART: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10. https://doi.org/10.1524/9783486703634

Weber, Hermann. 1974. *Die SED Nach Ulbricht*. Hannover, Germany: Fackelträger Vlg.

Weber, Hermann. *DDR,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45-1985 / Herausgegeben Von Hermann Weber*., 1986.

Wentker, Hermann. 2007. *Außenpolitik in Engen Grenzen Die DDR Im Internationalen System 1949-1989. Veröffentlichungen Zur SBZ-/DDR-Forschung Im Institut Für Zeitgeschichte*.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3. 영어

Frankel, Joseph. 1971.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 An Analysis of Decisionmaking*. 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ieco, Joseph M. "Modern Realist Theory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Millennial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Studies*, 65.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9.

Horak, Sven. 2010. "Pha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after World War II." *North Korean Review* 6 (1): 100 - 107. https://doi.org/10.3172/nkr.6.1.100.

Lüthi, Lorenz M. 2008. The Sino-Soviet Split : Cold War in the Communist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gowan, Patrick J, and Howard B Shapiro. 1973.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 A Survey of Scientific Findings*.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Rosenau, James N. 1969. *Domestic Sources of Foreign Policy : (2. Printing)*. New York: The Free Press. London: Collier-Macmillan.

Schäfer, Bernd. 2004. *Weathering the Sino-Soviet Conflict: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4: 25 - 38. Retrieved from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publication/CWIHP_Bulletin14_15.pdf

Shapiro, Jane P. 1975. "Sovie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Pacific Affairs* 48 (3): 335. https://doi.org/10.2307/2756413.

Sprout, Harold, and Margaret Sprout.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 no. 4 (1957): 309-28. Accessed June 2, 2021. http://www.jstor.org/stable/172942.

Snyder, Richard C, H W Bruck, and Burton Sapin. 1954. *Decision-Making a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Timm, Angelika. 2019. "Pragmatic and Ideological Aspects of GDR Policies in the Middle East." Palestine - *Israel Journal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24 (3): 104-111.
"From Satellite to Ally: Stages in GDR Foreign Policy." 1989. *The Adelphi Papers* 29 (240): 6 - 18. https://doi.org/10.1080/05679328908457595.

Abstract

The GDR's North Korea Policy - Focused on the Honecker Era and its Diplomatic Documents

Cho-Rong Lim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GDR, North Korea, diplomatic relations, North Korea policy
Student Number : 2018-20862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o highlight and analyse the maintenance of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e Honecker era betwee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East Germany)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Under what conditions was the diplomatic relationship maintained and how did it change? What di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contribute in achieving the goal of stabilizing the GDR's regime?

At first glance, North Korea appears geopolitically non-relevant to

East Germany however both were part of the Eastern Bloc and shared the same status quo (namely the division of the country). Additionally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communist ideology and the increasing meaning of the North Korean Juche ideology paired with the personality cult of Kim Il Sung led to disunity which depicted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both states.

In response to the research questions, this thesis argues that for East Germany, North Korea was nonetheless a socialist 'brother' state that served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Eastern bloc and simultaneously East Germany's socialist system.

This study was possible due to the 30-year secrecy period being lifted recently which allowed diplomatic documents of GDR to be available for analysis. The examined diplomatic documents mentioned above are primary data of the East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 and its 'Department for East Asia' (Abteilung Ferner Osten), as well as documents of the Politburo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of Germany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accessible at the German Federal Archives (Bundesarchiv). In addition, primary materials such as documents, reports and letters of ministerial meetings from the Archives of the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which are accessible, and secondary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research papers, and monographs related to East German foreign and domestic politics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After collecting data on diplomatic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he data were subdivided and structured, and the content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based on the method of Philipp A. E. Mayring (2015) according to each period and category.

Not enough studies have been sufficiently conducted as to why the relationship was maintained by East Germany in the first place and why it changed from 'pro forma' to a cooperative and active mutual relationship. The division and the ideological conflict of the Cold War exposed the GDR to an intrinsic systemic weakness, which the East German political elite attempted to counter by mobilising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how East Germany's political elite dealt with the unstable system, this study also analysed what structural factors determine the GDR'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realism and a detailed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 single case study method, focusing on East Germany's historical facts and their interpret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was establish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e Cold War, East Germany's diplomatic relations were limited to socialist countries until 1972 due to the ideological conflict at the time. Thus, the choice of diplomatic allies was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countries, and while North Korea still did not have a high priority for East Germany, it seems that the relationship could not be completely neglected for practical reasons.

During Ulbricht's rule in 1950-1971, East Germany took a passive position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for several reasons.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two countries made East Germany no longer abl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1950s, and it made it impossible for North Korea to consistently fulfill its obligations of agreements. This meant that solidarity between the socialist brotherhoods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as not stable enough. The

ideological gap between the East German-based international socialism and North Korea's Juche ideology and the personality cult also acted as a conflicting factor that worsened the relationship.

The two countries faced a clear turning point after Honecker's rise to power. Honecker had planned to visit North Korea and in advance there was an active exchange of letters between stakeholders from both countries, which included proposals for new agreements. What makes this change interesting is that during Honecker's rule East Germany was no longer isolated internationally, as it was able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Western countries, and on the surface it appears that there is no need to focus on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revious studies on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DR and North Korea include Schäfer(2004), Kang-Schmitz (2011), Lee Kyung-seok and Kim Gyeong-mi (2016). Past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little to no analysis and knowledge around East Germany's North Korea policies. In fact, previous studies on East German foreign policy are very limited. The few earlier studies on East German foreign policy have been mainly limi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and even these focus on foreig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rather than East Germany.

In conclusion, what can be confirmed from the analysis in this thesis is that East Germany also maint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it was beneficial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In fact, North Korea's pro active attitude in maintaining its relations with GDR during the Honecker period was the main driving force as to why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ossibl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a socialist brother state was helpful in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East Germany. Additionally, East Germany's awareness of international socialism played a major rol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ternational socialism as conceived by East Germany means "continuously strengthening mutual friendship, mutual benefit, and close cooperation, and jointly defending the achievements, interests and goals of socialism"., meant the desire for the communist bloc to prosper in order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regime. For East Germany, maintaining the status quo was a top priority, so it was not that East Germany was very satisfied with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that North Korea was very active in maintaining relations and made efforts to uphold the terms of the treaty.